교통운수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침수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 등록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 안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 도 법

제1장 철도법의 기본

제1조(철도의 지위와 사명)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철도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이바지한다.

제2조(철도에 대한 소유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철도는 중요산업국유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철도는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철도운수의 발전원칙)
수송은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중앙규정부분이다. 국가는 생산과 수송의 균형을 바로잡으며 생산에 앞서 수송능력을 미리 조성하는 원칙에서 철도운수를 발전시킨다.

제4조(철도건설원칙)
철도를 전망성있게 건설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지역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다 같이 발전시키는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도를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제5조(철도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철도를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은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의 중심과업이다.

- 465 -
국가는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철도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6조(철도운영의 정규화원칙)
철도에서 규율은 생명이다.
국가는 철도에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며 철도운영을 정규화하도록 한다.

제7조(높어지는 수송수요의 보장원칙)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생산의 정상화와 끊임없는 장성의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수송조직과 방법을 개선하며 집중수송, 집합수송, 연대수송을 강화하여 높어지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8조(철도수송에서 문화성, 봉사성제공원칙)
철도수송은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한 봉사사업이다.
국가는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여 철도를 알도록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며 철도수송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철도보호원칙)
철도를 건군중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수송에 갖은 관심을 가지고 철도를 힘있게 지원하며 철도를 보호관리하는데 주인담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10조(철도운수분야의 과학연구와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철도운수수단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철도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11조(철도운수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철도운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철도의 물질기술적의로대 강화

제12조(철도의 물질기술적의로대강화의 기본요구)
철도의 물질기술적의로대를 강화하는것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철도운수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운수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철도운수수단과 장비를 증량화, 현대로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철도의 전기화)
철도전기화는 우리 나라 철도운수발전의 기본방향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전기화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철도전기화를 완성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철도에 전력을 단독선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세우고 질좋은 전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 레인, 침묵, 고착물의 생산)
철도운수기관과 해당기관은 차량, 레인, 콘크리트침묵, 철길고착물생산기지들을
통합해 구리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기관차와 전동렬차, 중량화차, 객차,
중량배추, 콘크리트침묵, 철길고착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제15조(철길의 강도보강, 철도역구내선확장)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철도의 중량화, 현대화요구에 맞게 철길을 비롯한
철길구조물을 보강하고 중량배추, 콘크리트침묵을 받아들여 철길의 강도를 높이며 철
도역구내선을 늘려야 한다.

제16조(철길건설, 철도망확장)
국가계획기관과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은 중량화, 현대화된 철도철길을 전망적
으로 건설하며 통과능력이 기한한 구간에 복선화, 무회선, 렌선을 늘어 나이의 철도
망을 완비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철길은 운영할 수 없다.

제17조(철도역구내와 구간의 자동화)
철도운수기관은 콘크리트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을 널리 받아들여 철도역구내
와 구간을 자동화하며 철도사령지휘체계를 무선화, 텔레비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제18조(화물역과 전용선)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수송능력이 늘어나는지 따라 화물역과 전용
선에 화물을 입고부리거나 보관하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설비와 시설은 화물역과 전용선에 설치할 수 없다.

제19조(철도운수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의 중량화, 현
대화와 운영에 필요한 로직과 자재 설비를 다른 부문에 앞서워 보장하여야 한다.
기판사, 기판조사, 수리공, 철길원을 비롯한 철도총원들을 철도부문사업과 인
연이 없는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 수 없다.

제3장 렬차운행

제20조(철차의 무사고정시운행)
철도에서 렬차운행규를 강화하는것은 철도수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철도운수기관은 렬차운행조직과 지위에서 유일적인 사령지휘체계를 세우며 철도
운영을 정규화하여 렬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본선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1조(철차다님표)
철도운수기관은 렬차다님표를 정확히 만들고 모든 렬차를 다님표대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遑차다님표는 마음대로 고치거나 위반할 수 없다.
제22조(철도운수기관)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선로계획에 따라 철차를 편성하여야 한다.
철도선로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장이 한다.

제23조(화차교류과제)
철도운수기관은 화차교류과제를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운용화차는 보유기준보다 더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제24조(철도차량의 운영)
철도차량은 철도운수기관만이 운영한다.
철도운수기관은 기관차의 견인중량과 달립거리의 늘이고 정해진 화차화귀일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의 차량을 리용하려 할 경우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
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리용한 차량을 정해진 기간안에 돌려보내야 한다.

제25조(철차지휘와 운전취급)
철도일군은 철차지휘와 운전취급에서 규정과 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철차지휘와 운전취급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철도일군만이 할 수 있다.

제26조(차량의 장악등록과 예비조성 및 동원)
철도운수기관은 모든 차량을 바 짜짐없이 장악등록하며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수송에 필요한 기관차와 화차, 객차의 예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적인 긴급화물수송시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의 전용차량을 동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운수기관이 요구하는 전용차량을 제때에 보장하여
야 한다.

제27조(철도역)
철도역은 수송을 직접 맡아 수행하는 기층단위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역사업을 강화하여 철차운전취급과 력객 및 화물수송에서 철
도역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철도화물수송

제28조(철도화물수송의 기본요구)
철도화물수송은 철도운수기관의 기본임무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화물을 정해진 기간안에 정확
히 수송하여야 한다.

제29조(철도화물수송계획과 계약)
국가계획기관은 수송수요와 수송능력사이의 균형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철도화물
수송계획을 세워야 한다.
철도운수기기관과 집행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물수송계획에 근거하여 수송계약
을 제때에 맺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불합리한 수송의 금지)
국가계획기관과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역수송, 반복수송, 빈물등수송을 비롯한 불합리한 수송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집중수송)
철도운수기관은 큰 공장, 기업소나 일정한 지역에 실어나를 많은 양의 화물을 집중수송하여야 한다.
자체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집중수송의 요구에 맞게 계약된 물자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집합수송)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집합산란을 늘여 수송도중에 허실될수 있는 화물, 포장재가 많이 들거나 심고부기의 혼돈 화물은 집합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비 집합은 제때에 임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제33조 (련대수송)
국가계획기관과 운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대수송을 조직하여야 한다.
련대수송조직은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철도화물의 분류와 포장)
철도화물은 차량별, 적은량, 절은량으로 나누어 수송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송하려는 화물을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규격대로 포장하지 않은 화물은 수송할수 없다.

제35조 (철도화물의 신기)
철도운수기관과 집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물의 화차의 적재량과 해당한 규정의 요구대로 실어야 한다.
심유, 쇼봉, 허물 등을 비롯하여 압착할수 있는 부피가 크거나 가벼운 화물은 압착하여야 실어야 한다.

제36조 (특별화물의 수송)
방사성물질, 폭발성물질을 비롯하여 특수한 수송조건을 요구하는 화물의 수송은 따로 정한 규정에 따라 한다.

제37조 (화물을 신고부리는 작업분담)
철도역에서 화물을 신고부리는 작업은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그러나 차량집을 신고부리는 철도역의 혼돈이 없는 철도역과 전용선, 전용장소에서 화물을 신고부리는 작업은 집임자가 한다.

제38조 (화물의 신고부리기, 화차마무름시간)
철도운수기관과 집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물을 제때에 신고부려야 한다.
화물을 신고부리면 화차는 정해진 시간안에 철도역에 남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의 화차마무름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제39조(화물의 넘겨주고 받기)
철도운수기관과 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화물을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화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넘겨줄 때까지의 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물수송을 맡긴 기간에 생긴 손해의 보상을 철도운수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화물관리)
철도운수기관은 화물관리와 반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임차를 모르거나 보관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화물은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제41조(철도운임과 료금)
다른 나라 화차 또는 렌LEASE와화차를 리용하거나 화물수송을 맡긴 기관, 기업소, 단체
와 공민은 철도운수기관에 해당한 운임과 료금을 물어야 한다.
철도운임과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5장 철도객차수송

제42조(철도객차수송의 기본요구)
철도객차수송은 손님들의 렌행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병사활동이다.
철도운수기관은 렌행하는 손님들에 대한 병사성을 높여 그들의 안전하고 문화적
인 렌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객차렬차의 조치)
철도운수기관은 손님들의 렌행에 편리하게 렌객렬차를 조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구간에는 통근열차, 통학열차, 관광열차, 림시객렬차를 조식할 수 있다.
제44조(철도역과 객차의 병사시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역과 객차안에 여러가지 병사시설을 갖추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대한 안내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조명, 금수, 난방이 보장되지 않는 객차는 운영할 수 없다.
제45조(차표판매)
철도운수기관은 객차정원수에 맞게 차표를 팔아야 한다.
단체레렌을 조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에 미리 신청을 하여
야 한다.
제46조(철도에서 상업봉사)
철도운수기관은 열차식당을 잘 운영하며 열차안에서 손님들에게 청량음료를 비롯
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지방정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상업지도기관은 렌차상업에 필요한 식료품원자재를 생산공급하며 철도역구내에서 손님들에게 파일을 비롯한 지방특산물을 늘팔아주어야 한다.

제47조(려행도중에 생긴 화자치료)
철도운수기관은 렌행도중에 생긴 화자를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지역의 보건기관과 렌차에 탄 보건일군은 철도운수기관의 요구에 따라 렌행도중에 생긴 화자의 치료에 동원되어야 한다.

제48조(철도려행, 렌객렬차리용질서의 준수)
공민은 철도려행질서와 렌객렬차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지정된 차표가 없거나 손님들의 렌행과 차안의 질서유지를 지킴을 가지고 객차에 오를수 없다.

제6장 철도보호

제49조(철도보호의무)
철도를 보호하는 것은 렌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중요담보이다.
철도운수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제50조(철도보호구역)
철길과 철도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보호구역을 정한다.
철도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1조(철도보호구역의 관리)
철도보호구역안에서 논밭을 일구거나 집진송을 기르는 것을 비롯하여 철도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철길보호구역밖에 좌우 20m구간의 토지에는 나무를 심으며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관리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을 제외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본철길보호구역밖에 좌우 20m구간의 토지를 리용할수 없다.

제52조(철도시설물의 보호)
철도운수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정전기관은 철길목, 철다리, 차줄주변의 강기슭, 산비탈을 비롯하여 필요한 곳에 옥벽공사와 사태막이공사, 물폐기공사를 하여 자연피해로부터 철도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주요철길구간에는 보호란간, 보호철망 같은것을 설치하며 철다리밑으로 도로가 지나간 곳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전기사용피해방지)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전기화구간에 대한 전기절연대책을 세우며 철도시설물의 전기사용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54조(전용선건설, 보수)
전용선은 철도본선에서 직접 끌 수 없으며 철도역의 측선에서 끌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전용선을 놓거나 고치거나 철거하려 할 경우 철도운수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용선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는 차량과 철길을 비롯한 철도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전용선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감독통제는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제55조(철길통행금지)
주민은 철길로 다니지 말아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도로관리기관, 철도운수기관은 철길진행급을 만들 경우 사이거리가 2km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철길진행급에 립체다리나 지하진행급을 건설하여야 한다.
립체다리나 지하진행급을 건설할수 없는 철길진행급에는 감시초소를 만들어야 한다.

제56조(철도역과 철길주변관리)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철도역과 철도시설물을 잘 유지하고 그 주변관리를 위생문화적으로 하여 철도표식물을 문화성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기본철길주변에 수증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양면으로 리용하며 사막ثل기를 극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본철길과 잇닿아있는 산들의 부대기발, 무림특지에는 나무를 심어 수림화하여야 한다.
기본철길로부터 정해한 거리안에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짓지 말며 이미 있는것은 옮겨야 한다.

제57조(철도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도표식물, 신호통신시설, 봉사시설과 전기철도급전시설물 손상, 파괴하거나 철도운수기관의 송인없이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전차선로, 신호통신선로우로 고압선을 늘일 경우에는 규정된 높이를 보장하고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8조(차량관리)
철도운수기관은 차량에 대한 보수정비를 계획적으로 하여 차량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차량의 구조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량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59조(철길의 점검, 보수)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구간을 정하고 철길의 점검과 보수를 정밀하게 하여야 한다.
철길의 점검, 보수는 왜써리나 잔디 같은것을 싹아 철길이 뿌실되지 않도록 하며 언제나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 472 -
제60조 (집합과 수송비품관리)
철도운수기관과 집합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집합과 수송비품을 잘 관리
하며 그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집합과 수송비품은 다른 용도에 쓸 수 없다.
제61조 (철도보호에 대한 교양)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인민들속에서 철도를 예호하며 철도
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 (자연재해시 철도복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재해 같은 일로 철도복구작업이 제기될 경우 해당 기관
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의무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제7장 제 7

제63조 (원상복구와 손해보상)
차량과 철도시설물의 손상, 파괴하였거나 화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원상복
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4조 (벌금과 면허에서 내리우기)
철도관리정서와 열차리용정서를 위반하였거나 열도수송에 징장을 주었을 경우에
는 벌금을 물리거나 면허에서 내리울 수 있다.
제65조 (체차료와 위약금, 화차리용의 종지)
화차의 머무르시간을 초과하였거나 화물수송계약과 철도에 대한 자제공급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체차료 또는 위약금을 물리거나 화차의 리용을 종지시킬
수 있다.
제6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이겨 철도운영과 보호관리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
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47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제1장 철도차량법의 기본

제1조 (철도차량법의 성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철도차량법은철도차량의생산과등록,판리운영에서제도와질서를엄격히세워늘어나는인민경제의수송수요를원만히보장하고사회주의경제건설을다지치는데이바지한다.

제2조 (철도차량의정의와구분)
철도차량은철도를리용하여객차이나짐을실어나르는결정기체이다.
철도차량에는기관차,객차,화차같은것이속한다.
철도차량은가치만이소유한다.

제3조 (철도차량의생산원칙)
철도차량의생산을정상화하는것은철도수송능력을부단히늘리기위한선결조건이다.

국가는철도차량생산부문에대한투자를체계적으로늘여철도차량생산의문질기술적토대를틈틈히꾸리고현대적인철도차량수요에맞게생산하도록한다.

제4조 (철도차량의등록원칙)
철도차량의등록은철도차량을국가가통일적으로장악하고관리하기위한선차적요건이다.

국가는모든철도차량을빠짐없이등록하도록한다.

제5조 (철도차량의관리운영원칙)
철도차량의관리운영을잘하는것은철도차량의리용률을높여인민경제의수송수요를원만히보장하는데는나서는중요요구이다.

국가는철도차량의관리운영에서강한규율과질서를세우며정규화하도록한다.

제6조 (철도차량의보호원칙)
철도차량적극보호하는것은예국심의발현이다.

국가는인민들속에서사회주의예국주의교양을강화하여그들이철도차량을귀중히여기고보호하도록한다.
제7조(철도차량부문의 과학연구와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철도차량을 현대화하고 그 관리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철도차량기술일군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8조(교류와 협조)
국가는 철도차량의 생산과 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철도차량의 생산

제9조(철도차량생산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획관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차량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생산능력 같은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도차량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제10조(철도차량생산단위)
철도차량의 생산은 전문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에서 한다.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차량생산기지를 토대로 꾸며 기관차와 객차, 화차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철도차량의 중량화, 고속도화)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철도차량의 중량화, 고속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철도차량의 중량화, 고속도화설립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원만히 풀며 선진기술을 계매에 생산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12조(객차의 안전성과 문화성보장)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역행자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현대적인 객차를 생산하여야 한다.
객차에는 탈립장치, 렌질완충장치, 세동장치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차내조명과 균수, 난방, 행방장치 같은것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13조(화차생산)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특성이 서로 다른 품종의 화물을 원만히 실어나올수 있게 무개차, 유개차, 세멘트차, 유조차 같은 화차를 종류별로 생산하여야 한다.

제14조(철도차량생산의 질보장)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생산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생산되는 철도차량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철도차량의 수입)
해당 기관은 필요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으며 성능이 좋은 철도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철도차량의 시운전)
세로 생산 또는 수입하였거나 수리한 철도차량은 시운전을 하고 검사에서 합격되었을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다.
해당 점검기관의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철도차량은 운영할 수 없다.
제17조(철도차량의 표식)
철도차량에는 정해진 규격의 철도표식을 하고 번호를 달아야 한다.
철도차량표식의 규격과 번호를 정하는 사항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제18조(철도차량의 부분품, 부속품생산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생산에 필요한 부분품과 부속품을 자료별로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철도차량의 등록

제19조(철도차량의 등록기관)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을 철도차량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철도차량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영할 수 없다.
제20조(철도차량등록의 종류)
철도차량의 등록은 첫 등록, 이동등록, 변경등록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첫 등록은 철도차량을 새로 생산하였거나 수입하였을 경우에, 이동등록은 이미 등록된 철도차량을 이관받았거나 철도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의 소속 또는 명칭이 달라졌을 경우에, 변경등록은 철도차량의 구조와 용도, 색깔, 번호 같은것을 달리하였을 경우에 한다.
제21조(철도차량의 등록신청)
철도차량을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등록신청문건을 철도차량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철도차량관리기관은 철도차량등록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철도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철도차량의 이동등록 및 변경등록)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이미 등록된 철도차량을 이관받았거나 소속 또는 명칭이 달라졌거나 철도차량의 구조와 용도, 색깔, 번호 같은것을 변경시켰을 경우 제때에 이동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철도차량의 등록중서, 경력서의 발급)
철도차량관리기관은 등록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철도차량등록중서와 철도차량경력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철도차량등록중서는 철도운수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 철도차량경력서는 철도차량에 보관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철도차량등록증서의 제발급)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등록증서 또는 철도차량경력서를 분실, 오손사건을 경우 제때에 제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분실, 오손리유를 밝힌 제발급신청서를 철도차량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5조(철도차량의 실사)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등록하지 않은 차량, 잘못된 차량 같은것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실사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4장 철도차량의 관리운영

제26조(철도차량의 관리체계수립)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철도차량을 언제나 만가동할수 있게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철도차량의 기술검사)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때 따라 철도차량에 대한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술검사에서 불합격된 철도차량은 운영할수 없다.
철도차량의 기술검사결과와 방법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8조(철도차량의 기술검사종류)
철도차량의 기술검사는 첫 기술검사, 이관기술검사, 변경기술검사, 페기기술검사, 정기기술검사, 지정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
첫 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첫 등록하였을 경우에, 이관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이관받았을 경우에, 변경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변경등록하였을 경우에, 페기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폐기하여야 할 경우에, 정기기술검사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철도차량을 수리하였을 경우에, 지정기술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29조(철도차량의 운영)
철도차량은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따라 운영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제30조(철도차량의 리용)
철도차량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계획에 따라 철도운수기관과 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철도차량리용계약을 맺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철도차량을 배정할수 없다.
철도차량리용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에 해당한 로급을 물어야 한다.
제31조 (다른 나라 철도차량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의 철도차량을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차량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다른 나라의 철도차량은 정해진 기일안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32조 (철도차량의 무사고운행보장)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비를 정상적으로 하고 표준조작법대로 운영하여 언제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담한 리유로 짐질은 철도차량을 지체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철도차량의 인계인수)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을 인계인수할 경우 그 기술상태와 정비상태, 부속품상태를 갖춘 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되직한 다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철도차량의 수리)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수리기지를 둘로써 두리고 고장난 철도차량을 제때에 수리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수리는 대수리, 중수리, 소수리, 운영수리, 립시수리로 나누어 진행한다.
철도차량의 수리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제35조 (철도차량수리의 점보장)
철도차량을 수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분해, 가공, 조립, 시험, 검사 같은 공정상 요구와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철도차량을 질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철도차량의 구조변경 및 이관)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구조를 고치거나 철도차량을 다른 기관, 기업소에 넘겨주려 할 경우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차량을 넘겨줄 경우 부품이나 부속품을 떼내거나 바갈 수 없다.

제37조 (철도차량의 폐기)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사용년안이 지났거나 쓰러없게 된 철도차량을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철도차량의 폐기가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을 동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5장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밀에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등록, 관리운영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철도차량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생산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돌려진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은 다른 데 돌려쓸 수 없다.

제40조(철도차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동록, 관리운영 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철도차량생산계획을 미달하였거나 철도차량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철도차량을 동록하지 않고 운영하였을 경우
3.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철도차량을 운용하여 사고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4.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지 않고 제마무대로 철도차량을 운용하여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철도차량관리를 잘못하지 않아 파손시켰을 경우
6. 부당한 리유로 철도차량을 지체시켜 경제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철도차량의 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그 운용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다른 나라의 철도차량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아 대외적경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9. 승인이 없이 철도차량의 구조를 고치였거나 철도차량을 다른 기관, 기업소에 넘겨 주었거나 폐기시켰을 경우
10. 철도차량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홍청거나 파손시켰거나 그것을 가지고 장사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2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4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벌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제1조 (자동차운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은 자동차운행과 수송,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능아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자동차운수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자동차운수는 교통운수의 기본부문의 하나이며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는 중요고리이다.

국가는 자동차운수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능이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자동차운수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3조 (자동차운행의 정규화원칙)
자동차운행에서 규율은 생명이다.

국가는 자동차운행에 대한 사령지휘체계를 세우며 자동차운행을 정규화하도록 한다.

제4조 (자동차운행의 집수송원칙)
자동차집수송을 강화하는 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고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집중수송, 집합수송, 련대수송을 강화하고 여리가지 앞선 수송방법을 받아들여 자동차에 의한 집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자동차의 련객수송원칙)
자동차여객수송은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동사사업이다.

국가는 자동차여객수송조직을 개선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련객수송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6조 (자동차의 기술정비원칙)
자동차관리를 잘하는 것은 자동차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자동차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자동차의 기술정비를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7조 (자동차의 관리원칙)
자동차는 사회주의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운전사들과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금강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동차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자동차운수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토대로 우리고 자동차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기술인재와 운전사들을 전망 성 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 (자동차운수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자동차운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자동차운행

제10조 (자동차의 무사고운행)
자동차운행에서 규칙과 질서를 세우는것은 자동차운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행조직과 지휘를 바로하고 운전사의 책임성을 높여 자동차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동차담보
자동차운수사업소는 자동차운행조직을 담보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담보는 자동차운수사업소에서 만들어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불필요한 운행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자동차의 불필요한 운행을 조적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운전수와 운행문건)
자동차운전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격을 가진 운전사만이 한다.
자동차운행지령을 받은 운전사는 운전면허증, 기술검사증, 운행증과 필요한 문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자동차의 운행속도)
자동차운전사는 제정된 도로를 따라 규정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제우지 못하게 되는 장소에서 점을 설치 부리거나 사람을 태우고 내리울 수 없다.

제15조 (운행중 사고방지)
자동차운전사는 운행중 사고위험이나면 자동차운행을 중지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면거리의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중점검을 하여야 한다.
도중점검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16조 (표준운전조작법, 교통안전장비의 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전자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표준운전조작법과 교통안전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운행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정부기관은 도로를 계획적으로 포장하고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 건설을 전망성 있게 하며 도로표식물을 설치하여 자동차운행의 신속성,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집수송

제18조 (자동차집수송의 기본요구)
자동차집수송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점을 실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발전과 민생생활에 필요한 점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동차집수송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수송수요와 수송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자동차집수송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0조 (자동차집수송계약)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와 집단자기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수송계획에 근거하여 수송계약을 제때에 맺고 그것을 시행하여야 한다.

집수송계약은 년간, 분기별, 월별로 맺는다.

제21조 (불합리한 수송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리해하여야 할 집의 신속차를 바로 정하고 수송조직을 개선하여 역수송, 반복수송, 환복거리수송 같은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야 한다.

제22조 (런거리수송)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에 따라 런거리수송을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운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전문수송, 봉사수송, 기동수송)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집의 종류와 특성, 수송조건에 따라 전문수송, 봉사수송, 기동수송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24조 (집중수송)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많은 런의 집을 짜는 기간에 실이 널리야 할 경우 집중수송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런데수송)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런데집수송계획에 따르는 수송과정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런데집수송은 수송의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제26조(집합수송)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합을 널리 리용하여 집단수송의 문화성을 보장하며 수송도중 질의 허심, 파손을 막아야 한다.

집합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는 여러가지 집합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런결차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런결차의 리용률을 높여 더 많은 질을 수송하여야 한다.

런결차는 자동차의 기술상태와 운행조건에 맞게 탑아야 한다.

제28조(빈차운행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빈차운행을 없애며 자동차의 적재정량대로 질을 실고 다녀야 한다.

부득이 빈차운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자동차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점포장과 실고 부리의 작업의 기계화)

점포를 실고 부리는 작업은 집임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집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점포를 제정된 규격대로 포장하며 실고 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여 자동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여야 한다.

제30조(점의 호송)

집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의 자동차로 점을 실어나르
는 경우 호송원을 불여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와 합의하고 호송원을
불어지 않올수 있다.

제31조(운송점)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중요주민지구에 운송점을 내오고 주민들의 질을 수송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송점을 리용할수 없다.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제32조 (자동차려객수송의 기본요구)

자동차려객수송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출퇴근과 력행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력객수송에서 보상성과 문화성을 높여 인민들의 편의
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려객수송의 분류)

자동차려객수송은 력객수송형태에 따라 도시려객수송, 교속도로려객수송, 농촌
려객수송 같은것으로 나누어 한다.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제정된 운행로선에서 퍼스운행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운행로선과 정류소)
버스운행로선과 정류소를 내오거나 없애는 사항은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버스운행로선과 정류소를 인민들의 교통에 편리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35조 (택시, 단체여객수송)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보장하며 담사, 판광, 전학 같은 것이 제기되는 경우 단체여객수송을 조직할 수 있다.
단체여객수송을 보장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에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 (출퇴근보장)
자동차운수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가지고있는 버스를 근로자들의 출퇴근보장에 동원시킬 수 있다.
출퇴근보장에 동원된 버스는 정해진 로선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제37조 (빈버스운행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빈버스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 빈버스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들을 태워야 한다.
제38조 (농촌버스의 운영)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농촌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농촌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9조 (버스정류소, 손님기다림간)
지방정권기관과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버스정류소, 손님기다림간을 문화적, 생적으로 구리고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버스정류소, 손님기다림간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 (버스리용점서의 준수)
공무원은 버스리용점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지정된 차표를 내지 않거나 손님들의 렌월에 장사를 줄 수 있는 짐을 가지고 버스에 오를 수 없다.

제5장 자동차관리

제41조 (자동차관리의 기본요구)
자동차관리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관리를 잘하여 자동차의 실동률을 높여야 한다.
제42조 (자동차의 등록, 기술검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등록하고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 등록과 기술검사는 자동차감독기관이 한다.
제43조 (차고의 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차고를 건설하여야 한다.
차고에는 자동차보관관리에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44조 (자동차의 기술상태검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의 기술상태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하여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량한 자동차는 운행시킬 수 없다.

제45조 (차검차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전사를 교착시키고 자검차수를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에는 자검차수에 필요한 공구, 예비부속품 같은것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제46조 (자동차의 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점검하며 자동차수리정비소 같은 수리기지를 품질히 두고 주기에 따라 자동차를 수리하여야 한다.
자동차수리는 대수리, 중수리, 소수리로 나누어 한다.

제47조 (수리의 질과 기일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수리에서 분해, 가공, 조립, 시험, 검사 같은 공정과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키며 수리의 질과 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자동차의 구조개조 및 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자동차의 구조를 교체하거나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경우에는 부속품, 부분품을 때내거나 바꿀수 없다.

제49조 (자동차의 폐기)
해당 기판,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의 사용년한이 지났거나 쓰는데 없게 되어 폐기하려 할 경우 자동차감독기관과 합의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0조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동차운수부문의 계획화사업, 수송조직 사업, 자동차관리사업을 바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485 -
제51조(연유의 절약)
자동차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소비기준을 낮추며 대용연료를 적극 도입하고 연유를 절약하기 위한 관중적운동을 벌려야 한다.

제52조(자동차운수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동차부속품, 다이아생산기지를 꾸리며 자동차운수부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연유, 부속품, 다이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동차운행과 수송,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적류, 회수)
승인없이 자동차를 바꾸었거나 빌려주었거나 또는 교통안전질서를 지키지 않았거나 자동차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적류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제55조(손해보상)
수송계약규를 어겼거나 자동차를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자동차운수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인원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제1장 지하철도법의 기본

제1조 (지하철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은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지하철도운수의 발전원칙)
지하철도는 도시의 력객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지하교통운수수단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부문의 물질기술효태를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지하철도운수를 꾸준없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3조 (지하철도의 건설원칙)
지하철도건설을 바로하는것은 도시의 교통망을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를 현대적으로 전망성있게 건설하도록 한다.

제4조 (지하철도의 관리원칙)
지하철도관리는 지하철도의 설비와 구조물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를 과학기술적으로 문화성을 있게 관리하도록 한다.

제5조 (지하철도의 운영원칙)
지하철도운영에서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것은 열차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지하철도운영체계를 바르게하고 그 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제6조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
국가는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한다.

제7조 (지하철도부문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지하철도부문 사업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지하철도의 건설

제8조 (지하철도건설의 기본요구)
지하철도건설은 도시의 력객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하철도를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9조 (지하철도건설을 위한 조사)
지하철도건설을 위한 조사는 지하철도설계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설계기간은 도시의 상태, 도시발전전망계획과 그에 따른 력객호름량, 건설지대의 지질학적, 수문학적조건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하철도건설계획의 작성)
지하철도건설계획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도시건설총계획과 지하철도건설계획에 기초하여 지하철도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지하철도건설설계의 작성)
지하철도건설설계의 작성은 지하철도설계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설계기관은 지하철도건설을 위해 조사자료와 력객수송능력, 환경보호의 요구 같은것을 고려하여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하철도건설의 담당자)
지하철도건설은 지하철도전문건설기관이 한다. 지하역의 역화와 조각장식 같은것은 해당 전문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13조 (설계의 요구, 기술규정, 표준공법의 준수)
지하철도건설기관은 건설에서 공정순위를 바로 정하고 설계의 요구와 기술규정, 표준공법을 엄격히 지키며 그 절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려가서는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공정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제14조 (로동재해의 근절)
지하철도건설기관은 로동안전시설을 정확대로 갖추며 로동재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전설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하여야 한다.

제15조 (지하철도건설작업의 기계화)
지하철도건설기관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갖추고 전설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하철도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지하철도구조물의 건설)
지하철도에는 차굴, 역사, 공기잘이굴, 계단승강기구, 위생기술설비실, 변전소 같은 구조물도 건설한다. 필요에 따라 자고, 검차소 같은것도 지하에 건설할 수 있다.
제17조(지하철도역건설)
지하철도역은 도시계획에서 러객들이 많이 접촉되는 지점에 지상교통운수수단과의 맞물림을 고려하여 건설한다.
계단승강기구는 두개 또는 하나 건설할 수 있다.
제18조(지하철도설비의 설치)
지하철도에는 운영을 위한 계단승강기, 신호, 전력, 통신, 조명, 위생기술설비 같은 것을 설치한다.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졌거나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제19조(준공검사)
지하철도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지하철도는 지하철도운영기관에 넘긴다. 이 경우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문건 같은것을 함께 넘겨준다.

제3장 지하철도의 관리

제20조(지하철도관리의 기본요구)
지하철도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지하철도의 리용률을 높이고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의 설비와 구조물관리를 정확히 분담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경기검사)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설비의 기술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지하철도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새로 받았거나 수리한 지하철도설비는 시운전에서 합격되어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기술정비)
지하철도설비의 기술정비는 주기에 따라 한다.
기술정비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지하철도운영기관이 한다.
제23조(접중정비)
지하철도설비의 접중정비는 월에 1차 한다.
설비접중정비날에는 지하철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제24조(수리)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수리기지를 훼손해 누리고 지하철도설비를 계획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설비의 수리는 대수리, 중수리, 소수리로 나누어 한다.
제25조(수리의 절과 기일보장)
지하철도운영기관과 지하철도설비의 수리를 의뢰받은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 수리공정을 정확히 지키며 수리의 절과 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구조물의 보수)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하철도구조물의 보수를 바로하여 지하철도의 문화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구조물의 보수는 대보수, 소보수로 나눈다.
대보수기간에는 해당 지하철도역을 운영하지 않는다.

제27조(열차와 지하철도역의 관리)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열차와 지하철도역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깨끗이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28조(공기같이굴보호구역)
국가는 지하철도의 공기같이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같이굴보호구역을 정한다.
공기같이굴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9조(공기같이굴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공기같이굴보호구역에 들어가거나 보호구역에서 공기같이와 굴보호에 지장을 주는 전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과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지하철도근무성원의 출입보강)
지하철도근무성원은 공기같이굴을 보수하거나 지하철도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기같이굴의 보수 또는 설비의 정비를 위한 지하철도 근무성원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군중적인 지하철도의 보호)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여 그들이 지하철도를 보호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민은 지하철도의 설비와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거나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지하철도의 운영

제32조(지하철도운영의 기본요구)
지하철도운영에서 규율은 생명이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유일적인 사령지휘체제를 세우고 열차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열차운행표)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열차운행표를 정확히 만들고 열차를 운행표대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차운행표는 마음대로 고치거나 위반할 수 없다.
제34조(렬차의 운전)
렬차의 운전은 해 당한 자격을 가진 기관사만이 한다.
기관사는 열 차운전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관사가 없이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제35조(열차운행시간의 보장)
열차사령과 운전지휘관, 기관사는 정한 열차운행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운전지휘관은 시각계 또는 시각지시기가 과장된 경우 기관사에게 해당 시각을 알
려주며 제때에 수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계획운행기의 운영)
지하철도운영기관은 계획운행기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력객류동량이 많은
시간에는 계획운행기를 모두 돌려야 한다.
력객류동량이 특별히 많은 시간에는 따로 정한 절서에 따라야 한다.

제37조(공기결이, 사고방지조치)
지하철도운영기관은 공기결이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지하철도안에 많다고 깨
끗한 공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역과 정한 곳에는 소방설비를 갖추며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지하철도의 운영시간)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정한 운영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력객류동량이 특별히
많은 경우에는 정한 운영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
지하철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사항은 내각이 한다.

제39조(지하철도운영의 공시)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운영시간이 변경되었거나 집중정비 또는 대보수로
지하철도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제때에 지하철도지상역들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봉사성의 체고)
지하철도운영기관은 력객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이며 그들이 지하철도운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그밖에 사정으로 지하철도운영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 력객들에게 예견
되는 운영시간 같은것을 즉시 알려주며 제때에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지하철도근무성원의 요구준수)
지하철도를 리용하는 력객은 지하철도근무성원의 근무수행을 방해하지 말며 지하
철도운용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지하철도운용의 편리보장)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역에 방향표시판, 종합안내판 같은것을 설치하여 력객들
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시간에는 지하역의 위생시설을 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차표판매)
지하철도차표는 지하철도의 지상역에서 판다.
지하철도차표판매시간은 지하철도의 운영시간과 같게 정한다.
제44조 (차표에 의한 지하철도의 리용)
공민은 지하철도차표를 내고 지하철도를 리용하여야 한다.
또는 베타표 같은것을 내고 지하철도를 리용할수 없다.

제45조 (지하철도에서의 금지사항)
공민은 지하철도에서 설비와 건축물에 손상을 주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밝는
것 같은 행위를 하거나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짐을 가지고 지하철도를 리
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 (지하철도역에서의 상업봉사활동)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역에서 렐객들의 편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상업봉
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7조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교통운수정책을 정착
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8조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말에 지하철도지도기관
이 한다.
지하철도지도기관은 지하철도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9조 (국가정책기념과 위배)
국가는 지하철도부문을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기능을 세우며 이 부문 근무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

제50조 (로역과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하철도부문에 필요한 로역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전력의 공급)
전력공급기관은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력시설과 설비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보수체계
를 세우고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전력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제52조 (물의 공급)
도시경영기관은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규수관절비와 물탱크관리를 바로하여 물을 지하철도의 관리 운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53조(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하철도지도기판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지휘중지, 자격정지)
지하철도철차운행지휘와 운전지휘 또는 운전조작을 잘못하여 혼차운행시기를 심히 어겼거나 설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여 렡객들에게 불편을 준 경우에는 해당 지휘를 중지시키거나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55조(원상복구, 손해보상)
지하철도의 설비와 건축물에 손상을 주었거나 파손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6조(벌금, 지하철도역밖으로 내보내기)
지하철도철차운행사건을 어겼거나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지하철도역밖으로 내보낸다.

제5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19조 (민용항공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은 민용항공기와 비행장의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절서를 엄격히 세워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항공법에 대한 자주권의 행사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공에 대하여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한다.

제3조 (항공보수의 발전원칙)
항공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민용항공부문의 물질기술토대를 토대로 꾸려 놓거나는 항공수송수요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민용항공기의 관리원칙)
항공기에 대한 관리 민용항공산업의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민용항공기의 관리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 (비행장운영의 과학원칙)
비행장을 현대적으로 꾸려는것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추세에 맞게 비행장운영을 과학적하도록 한다.

제6조 (민용항공부문의 과학연구. 일군양성원칙)
국가는 민용항공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민용항공일군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 (항공보험제의 실시원칙)
국가는 항공사고에 의한 피해와 손해를 제때에 보상받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보험제를 실시한다.
제8조(민용항공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민용항공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국제협약의 효력)
민용항공사업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항공성원

제10조(항공성원의 의무)
항공성원은 민용항공사업의 직접적달달당자이다.
항공성원은 승무임무, 지상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성원의 구분)
항공성원은 승무성원과 지상근무성원으로 나눈다.
승무성원에는 승조장, 비행사, 항법사, 승무기사, 승무전수, 승무안내원, 승무지도성원이, 지상근무성원에는 비행지휘원, 비행기술정비원, 항공무신통신수, 항공수송직책 및 통사성원이 속한다.

제12조(항공성원의 자격)
항공성원으로는 항공분야의 전문교육을 받고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 수 있다.
항공성원의 자격을 주는 사항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13조(항공성원의 소지증서)
항공성원은 해당 자격증, 건강검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자격증, 건강검진증의 유효기간을 연기받으려 할 경우에는 자격부정,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은 해당 의료기관이 한다.

제14조(항공기승조의 구분)
항공기의 승조는 승조장과 해당 승무성원으로 구성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기의 종류와 운행목적, 해당 조건에 맞게 승조의 구성과 인원수, 비행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승조장의 의무)
승조장은 비행임무수행과 안전, 항공기에 있는 인원과 재산, 화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승조원과 력객은 승조장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제16조(항공기위험시 승조장의 위치)
승조장은 항공기에 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항공기에서 마지막으로 떠나야 한다.
제17조 (조난시 송조장의 임무)
송조장은 조난신호를 받았거나 조난당한 항공기 또는 배를 발견하면 그 장소를 항행일지에 기록하고 비행지휘소에 통보하며 가능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송조장의 권한)
송조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송조를 지휘하며 항공기안의 질서를 세운다.
2. 항공기의 출발, 리착륙, 항로비행의 중지, 리륙한 비행장으로의 귀환, 비상착륙에 대한 결심을 한다.
3. 항공기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지시에 응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우거나 항공기에서 내리울 수 있다.

제3장 항공기

제19조 (항공기의 구분)
항공기는 민용항공사업의 기본수단이다.
항공기에는 비행기, 직승기, 활발기, 기구 같은것이 속한다.

제20조 (항공기의 등록)
항공기에는 정해진 국적표식과 등록표식을 한다.
항공기를 등록하는 사업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21조 (항공기의 비행유용성검사)
항공기의 비행유용성검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기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하고 비행유용성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항공기의 접수)
항공기를 새로 접수하는 항공회사는 항공기의 기술상태를 보완하는 비행유용성증명서를 넘겨받아야 한다.
항공기를 대수리하였거나 정해진 장비를 정비하였을 경우에는 비행유용성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23조 (무선통신수단의 설치, 리용허가)
항공기의 무선통신수단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이 발급하는 항공기무선국사용허가증을 받지 않고서는 항공기의 무선통신수단을 리용할 수 없다.

제24조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문건)
항공회사는 항공기에 항공기등록증명서, 비행유용성증명서, 항행일지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정한 문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 (항공기의 운행허가)
항공기의 운행허가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4장 비행장

제26조(비행장의 소유권과 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비행장은 국가의 소유이다.

제27조(국제비행장에 설치할 검사, 검역기관)
국제비행장은 국제비행장의 운영자료를 향행통보로 공포하여야 한다.

제28조(비행장의 등록과 운영허가)
비행장의 등록과 운영허가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29조(비행장의 운영기준)

제30조(비행장구역안의 표식)

제31조(비행장주변의 안전보장)

제5장 항공기의 운행

제32조(항공기운행의 기본요구)
항공기의 운행은 계획에 따라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행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비행지휘와 통보봉사를 정확히 하여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중구역의 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구역은 공화국의 경도, 경해의 상공과 잇당은 평양
비행통보구역안의 모든 공중공간을 포괄하는 비행지휘구역이다.
비행지휘구역은 항공로와 항로지점, 비행장구역, 비행혼행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자한구역, 비행위험구역으로 나눈다.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항공기는 항공교통기관의 비행지휘를 받으며 해당 구역에
따라 정해진 요구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34조 (항공기운행의 승인)
항공기를 운행하려는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비행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
어야 한다.
비행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35조 (항공기의 비행허가)
항공기는 비행지휘소의 허가를 받고 비행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리착륙순서와 시간, 비행방식을 정하는 사업은 비행지휘소가 한다.

제36조 (항공기의 비행)
항공기는 정해진 항공로 또는 항로지점을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항공로 또는 항로지점을 변경하거나 우회하여 비행하려 할 경우에는 비행지휘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항공기의 국경통과)
항공기는 국경통과지점상공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지휘소의 통과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경을 통과할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 비행제대고도를 비행지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항공기의 비행방조)
항공기는 정해진 항공로나 항로지점에서 벗어났을 경우 즉시 비행지휘소에 알리
고 비행지휘소가 지정하는 항공로나 항로지점, 비행구역에 들어가야 한다.
비행지휘소는 항공기가 승인된 비행계획과 정해진 비행규칙대로 비행하도록 가능
한 방조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항공기의 통신)
항공기는 비행과정에 비행지휘소와의 통신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행지휘소와의 통신이 끊어졌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서대로 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인접국가 또는 해당 비행지휘소들과 비행지휘협동을 위한 협
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경시비행, 계기비행규칙의 준수의무)
항공기는 비행지휘소의 승인을 받은 다음 경시비행 또는 계기비행규칙대로 비행
하여야 한다.
경시비행, 계기비행규칙을 정하는 사업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6장 항공영업

제41조 (항공영업의 구분)
항공영업은 항공운수의 중요분야이다.
항공영업에는 항공운수영업과 항공작업 같은것이 속한다.

제42조 (항공운수영업의 허가)
항공운수영업은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을 받은 항공회사가 한다.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의 발급은 민용항공관리기관장이 한다.

제43조 (항공회사의 운영허가증발급)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항공회사는 회사의 운영지도서, 운영제원, 항공기운영을 위한 최소기준, 수송규칙, 요금표 같은 항공회사운영허가신청문건을 민용항공관리기관장에 내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장은 신청문건의 검토와 예비검열, 검열을 통하여 신청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운영제원을 승인하고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장은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을 발급한 후에도 해당 항공회사에 대한 검열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44조 (다른 나라 항공운수영업의 허가)
정부사이의 협정에 따라 국제항공운수영업을 하려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정기 항공운수영업을 하려 할 경우에도 민용항공관리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항공수송계약)
항공수송은 항공회사와 레객 또는 임입자사이에 맺은 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수송계약에 따라 항공회사는 비행기표, 돈무는 손집료, 화물부첨표가같은 것을 발급하며 레객 또는 임입자는 정해진 요금을 물 의무를 진다.

제46조 (항공수송계약의 증지)
항공회사는 비행안전상태가 없거나 항공수송이 공화국의 법 또는 출발, 도착하는 나라의 법에 위반되거나 레객의 상태가 항공기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경우 해당 수송계약의 리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47조 (비행기표의 물리기)
레객은 산 비행기표를 정해진 기간안에 물리될 수 있다.
비행기표를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물릴 경우에는 해당한 수수료를 문다.

제48조 (운행이 중지, 취소되는 항공기의 화물처리)
항공회사는 항공기의 운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화물을 부친자와 받을자에게 알리고 그 처리내역을 세워야 한다.

제49조 (화물부첨표에 지적할 사항)
항공회사는 화물부첨표에 출발지점, 도착지점과 경유지점을 밝혀야 한다.
화물부첨표에 지적된 사항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 499 -
제50조(부치는 화물의 수속)
화물 하루튜치는 사항공회사에 해당 문건을 내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항공회사에 화물 수속서 다음 발송되기 전까지는 수을 부치는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물부치는자의 책임)
물부치는자는 물부치서의 내용대로 신고하며 정해진대로 포장한 화물을 항공회사에 넘겨주어야 한다.
물부치서 정확히 하지 않았거나 정해진대로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넘겨주어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화물을 부치는자가 진다.

제52조(발송한 화물의 처리)
화물은 이는 발송한 화물을 넘겨받을자가 없거나 넘겨줄 수 없을 경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발송된 화물의 수속)
항공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화물을 받을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화물의 도착에 대하여 통지받은 화물을 받을자는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54조(항공회사의 책임)
항공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력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시작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사망하였거나 인체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2. 수송지연, 취급부주의의 같은 사유로 력객이나 손문, 화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항공기의 사고 또는 항공기에서 멸어진 물체에 의하여 제3자가 사망하였거나
   피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55조(항공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조건)
항공회사는 사망, 피해, 손해, 사고의 원인이 력객이나 집임자의 허물 또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에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이 경우 항공회사는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제56조(수송도중 화물의 책임)
수송도중 손실이나 화물의 손상,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고된 범위에서만 진다.
집임자는 손실이나 화물의 수량 또는 가치를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위험화물의 수송)
항공회사는 위험화물을 정확히 분류하고 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화물수송과 관련한 국제민용항공협약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8조(항공기의 임대, 전용, 호상교환계약)
항공회사는 항공기의 임대, 전용, 호상교환을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항공기의 임대계약, 전용계약, 호상교환계약은 국제민용항공협약 해당 조항의 요구에 맞아야 한다.

제59조(항공기의 리용계약)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공회사와 항공작업계약 또는 항공사용계약을 맺고 농업, 건설, 임업, 수산, 탐사부문의 작업과 채영, 과학연구, 체육문화활동, 의료방조, - 500 -
조난구조 같은데 항공기를 리용할 수 있다.
조난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항공기사용계약을 맺지 않고 구조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항공작업계약)
항공회사와 해당 기관, 기업체, 단체는 항공작업계약을 정확히 맺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작업대상과 량, 작업구역, 항공작업에 리용할 비행장 또는 착륙장, 해당 설비의 리용절차, 로금지불조건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61조 (계약의 리행의무)
항공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작업을 끝내며 작업의 질, 작업과정에 제3자에게 까진 피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항공작업을 주문한 기관, 기업체, 단체는 계약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62조 (항공작업의 지휘)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작업조직과 진행, 항공기의 리용에 대한 지휘를 바로하여 작업의 효과성을 높이면서 항공작업이나 항공기의 리용과정에 환경, 농작물, 절진습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63조 (손해보상청구)
항공업체과정에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체, 단체와 공민은 해당 항공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는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7장 다른 나라 항공기의 운행

제64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착륙, 리륙, 통과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다른 나라 항공기는 정부사이의 협정 또는 국제 협약에 따라 착륙, 리륙, 통과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화국의 항공법규를 지켜야 한다.

제65조 (경기항로비행의 승인)
경기항로비행을 하려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비행계획과 비행시간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계획과 비행시간표를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66조 (비정기항로비행허가의 신청)
비정기항로비행을 하려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는 비행허가신청서를 민용항공관리 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정기항로비행허가신청기간은 항행통보로 공포한다.

제67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리륙중지)
다른 나라 항공기는 정해진 문제를 정확히 갖추어야 한다.
정해진 문제를 갖추지 않은 다른 나라 항공기의 리륙을 중지시킬 수 있다.

- 501 -
제68조(다른 나라 항공기의 착륙조건)
비행지휘소는 통과비행승무를 받은 다른 나라 항공기가 공화국의 비행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항공기에 실은 화물을 검사할 필요가 생겼거나 또는 항공기의 비행에 불리한 일기조건이 조성되었을 경우 착륙시킬 수 있다.

제69조(다른 나라 항공기의 구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다른 나라 항공기에 위험이 조성되었거나 사고가 생긴 경우 구조대책을 세우고 해당 나라의 민용항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다른 나라 항공기의 조사)
다른 나라 항공기가 송인없이 공화국의 공중구역으로 들어왔거나 비행길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위험구역에 들어섰을 경우에는 착륙시키고 그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비행부담과 책임은 항공기의 승조장 또는 해당 항공회사가 진다.

제71조(비용료금)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비행하는 다른 나라 항공기는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제8장 항공보안

제72조(민용항공보안사업의 기본요구)
공화국령에서 민용항공보안사업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보안사업결서를 바로세우고 항공보안사업을 조직제수해야 한다.

제73조(민용항공보안사업의 관할)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다음의 행위를 막기 위한 항공보안사업을 한다.
1. 항공기呂치 또는 그와 관련한 행위
2. 항공기에 탑승한 레객에 대한 목격행위
3. 비행장의 몰사정원에 대한 목격행위
4. 지상에 있는 항공기를 파손시키는 행위
5. 비행장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장치, 물건 같은 것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행위
6. 비행장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
7. 비행하는 항공기에 거짓정보를 하는 행위

제74조(항공보안결서의 준수의무)
기판,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공보안결서를 각각으로 준수하며 레객과 항공성원의 안전, 항공기의 운항과 비행장, 민용항공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75조(항공보안결서를 받을 의무)
레객, 항공성원은 항공기의 탑승전에 손잡, 휴대품에 대한 항공보안결서를 받아야 한다.
항공보안결서를 받지 않은 레객, 항공성원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제76조 (항공기 조난구조, 사고조사의 기본요구)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는 조난당한 인원과 재산을 구원하고 항공기사고의 원인을 해명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공화국령에서 항공기의 조난구조, 사고조사는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에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77조 (항공기의 조난인정)
승조의 혼으로 극복할수 없는 사태가 생겨 항공기와 인원에게 위협이 조성되었거나 비행지휘소와의 통신이 끊어져 위치를 알수 없는 항공기는 조난중에 있는것으로, 총독 또는 추락하여 파괴되었거나 심한 손상을 입었거나 비행장이 아닌 곳에 불시착륙한 항공기는 조난당한것으로 인정한다.

제78조 (항공기의 조난신호)
항공기는 조난중에 있거나 조난당하였을 경우 즉시 조난구조지휘소에 보고하며 조난신호를 보내야 한다.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받은 비행지휘소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조난구조지휘소와 지방정경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 (항공기의 조난구조작업)
항공기의 조난에 대하여 통보받은 조난구조지휘소는 즉시 조난탐색, 구조작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원부터 먼저 구조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조난구조작업은 비상재해극복작업절차대로 한다.

제80조 (항공기의 조난자료처리)
조난당자와 조난탐색, 구조작업에 동원된 성원은 사고현장과 증거물을 보존하며 조난과 관련한 자료를 조난구조지휘소에 내야 한다.

제81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조난작업승인)
다른 나라 민용항공기관은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사고가 난거나 조난당한 자기 나라 항공기에 대한 탐색, 구조작업 및 사고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2조 (조난탐색, 구조작업의 비행지휘)
조난탐색, 구조작업을 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행지휘는 해당 비행지휘소가 한다.
조난탐색, 구조작업구역은 비행통보구역과 같다.

제83조 (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의 조직과 사고조사방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소 또는 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조직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지방정경기관과 민군보안기관, 법의 감정기관, 해당 기관은 항공기사고조사사업을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 503 -
제84조(항공기의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항공기사고조사조.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와 그 안의 물품, 비행 보장을 위한 조사를 하고 사고원인을 해명하여야 한다.
기판,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공기의 사고조사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어야 한다.

제10장 항공보험

제85조(항공보험의 구분)
항공보험은 항공회사와 항공운수자에 대한 보험,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과가도이다.
항공보험에는 항공기사고보험, 항공여객상해보험, 항공수시보험, 항공화물보상 책임보험, 항공기제3자보험 책임보험 등이 속한다.

제86조(위무적인 항공보험)
항공회사는 항공보험에 들여야 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항공회사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87조(항공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의 체결, 미행결차와 방법은 공화국의 보험법규에 따른다.
항공보험금액의 범위는 국제협약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제11장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제88조(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민용항공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민용항공사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89조(민용항공사업의 지도)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의 지도말에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민용항공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90조(민용항공관리기관의 임무와 권한)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민용항공정책과 항공법의 집행, 국제협약의 수행을 위한 세칙, 규칙, 지도서를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여 필요할 경우 민용항공법의 수정보충안을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직접 제기한다.
2. 다른 나라와 민용항공분야의 협정을 체결한다.
3. 공중구역의 리용조직과 비행지휘, 비행보험사업을 한다.
4. 국채, 국내항공료와 그 리용절차를 정하고 공포한다.
5. 새로운 국채, 국내항공운영신청을 접수, 검토하고 허가한다.
6. 항공기사이의 수평분리표준과 비행제대로도를 정한다.
7. 민용항공시설의 신설, 유지, 갱신, 관리와 관련한 대책을 세운다.
8. 민용항공사업에 필요한 인원보장, 항공성원양성사업을 한다.
9. 민용항공경찰원을 임명하여 비행안전검열, 항공성원들의 자격검열사업을 한다.
10. 이밖에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을 한다.

제91조(비행과 관련한 자료의 통보)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비행계획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위험구역과 관련한 자료
를 항행통보와 통신수단을 통하여 해당 항공기들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92조(민용항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민용항공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비행장의 운영정조, 항공회사의 영업실
태, 항공교통의 관리정형 같은 민용항공사업진행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9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비행장이나 항공회사의 운영중지, 해당 승인의 취소, 항
공성원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 강금, 벌금부과, 손해보상 같은 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94조(의견상의 해결)
민용항공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중재,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
결한다.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 운 법

주체69(1980)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회의 결정 제16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2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5호로 수정보충

제1장 해운법의 기본

제1조(해운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은 배관리운영과 취급에서 제도와 절서를 엄격히
세워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해상운수발전원칙)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
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자립적인국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배를 많이 무어내고 항을 현대화하도
록 한다.

제3조(배관리운영원칙)
배의 관리운영은 해운사업의 중요내용이다.
국가는 배관리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배관리운영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독자
성을 보장한다.

제4조(배의 안전한 항해보장원칙)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것은 해상수송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항해지휘체계를 바로세우며 기술관리를 잘하고 선원대를 훈련히 주려 배
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해상수송원칙)
해상수송을 창고드는것은 배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공간이다.
국가는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계획 및 제약규를 엄격히 지켜 늘어나는 해상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배의 취급원칙)
국가는 배취급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배취급에서 통사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7조 (해난사고방지원칙)
국가는 해난사고를 미리 막으며 해상수송과정에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해상보험제를 실시한다.

제8조 (해상운수의 과학화원칙)
국가는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제9조 (해운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해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 (해양관계 국제협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양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배

제11조 (배의 소유권과 등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배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해사감독기관에 등록하고 배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2조 (배의 국적취득)
다른 나라 국적을 가졌던 배는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국적상태증서가 있어야 공화국국적을 소유할 수 있다.
공화국국적을 소유하였던 배는 국적등록부에서 삭제되어야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판매된 배에 대하여서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공화국국적배의 국가계약)
공화국국적을 소유한 배에는 우리 나라 국기를 달다.
공화국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배라 하여도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가 우리 나라에 있고 공화국공민을 선원으로 승선시킨 경우에는 우리 나라 국기를 달수 있다.

제14조 (용선, 항영배의 국가계약)
다른 나라 배를 장기간 용선하여 공화국공민을 선원으로 승선시킨 경우에는 우리 나라 국기를 달수 있다.
항영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배에는 공화국공민을 선원으로 승선시켜도 다른 나라 기발을 달수 있다.

제15조 (배의 검사)
배는 항해안전성, 로동조건과 작업수단의 안전성, 바다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해사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 507 -
해사감독기관은 항해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배의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점진하는 량, 항해구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다른 나라 항에서 우리 나라 배의 검사)
다른 나라 항에서는 우리 나라 배에 대한 검사는 항해감독기관의 의뢰에 따라 공동국령사대표기관이 조직한다. 그러나 공동국령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배에 대한 검사를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직한다.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서는 배가 우리 나라로 오는 항차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배의 문건과 표식)
배에는 국적과 항해안전성을 인증하는 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짐문건 같은것을 갖추고 선적항, 배감검을 비롯한 해당한 표식을 한다.
배의 골목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표식을 할 수 있다.

제18조 (배의 리용과 구조변경)
배관리운영기판, 기업소, 단체는 배를 그 사명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배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려 하거나 배의 구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배의 수리)
배관리운영기판, 기업소, 단체는 배에 대한 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주기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배수리기업소는 배수리를 정해진 기간안에 일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배의 매매, 폐선)
배관리운영기판, 기업소, 단체는 배를 팔고 사거나 폐선시키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선 원

제21조 (선원의 지위와 임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원은 항해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배관리의 주인이다.
선원은 배와 짐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며 당직근무와 항해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선원의 자격)
선원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 수 있다.
해당한 자격을 주는 사항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23조 (선원증)
선원은 공동국선원증을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로 다니는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공화국력권을 대신한다.
다른 나라에서 새로 산 배에는 그 배의 설비조작을 위하여 다른 나라 선원중을 소유한 선장을 일정한 기간 승선시킬 수 있다.

제24조 (선장의 지위와 임무)
선장은 항해와 선원들의 활동을 지휘하는 배의 책임자이다.
선장은 배와 배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항해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선장의 책임과 대리행위)
선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배가운영기판, 기업소, 단체앞에 책임진다.
배가운영기판, 기업소, 단체 또는 집합자가 없는 곳에서 선장은 공동으로 미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배 또는 집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배가운영기판, 기업소, 단체 또는 집합자가 진다.

제26조 (다른 나라 항에서 방조)
다른 나라 항에 돌아간 배의 선장은 그 나라 주재 공화국립사태포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 (선원들의 로동조건보장)
배가운영기판, 기업소, 단체는 선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해주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주어야 한다.

제4장 항해

제28조 (항해지휘)
항해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따라 목적항으로 배를 도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배가운영기판, 기업소, 단체는 항해하는 배를 정확히 장악하고 항해지휘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 (항해준비상태의 검사)
항해준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의 항해준비상태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기술준비와 항해전비물자, 인명보호수단, 배운선 같은것의 갖추지 못하였거나 안전항에서 관한 국제법서대로 준비하지 못한 배는 출항시킬 수 없다.

제30조 (해상충돌예방, 특수항해철서의 준수)
항해하는 배는 해상충돌예방법과 해당 수역의 특수항해철서를 지켜야 한다.
공화국령해와 항수역에서 배는 정해진 질서를 지키며 항해감독기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 (바다, 내기의 오염행위금지)
공화국령해와 항수역에서 배는 버림물, 오물을 버리거나 바다와 내기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항수역과 배길보호, 배의 항해에 지장주는 행위의 금지)
항수역과 배길보호, 배의 항해에 지장물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에 침몰된 배를 항무감독기관이 정한 기일
안에 전지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항해에 지장물을 종수하는 수중작업을 하거나 턴시시설
물을 설치할 때 행할 경우 항무감독기관 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고 수로기관
에 알려야 한다.
제33조 (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
배길표식기관은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통일적인 배길표식체계를 세우고 현대적
인 배길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한 배길표식물은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수로의 조사)
수로기관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로조사사업을 계획적으로 하
여야 한다.
해도와 항해에 필요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며 정해진 항해질서, 항해위험구
역, 배길조건의 변동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 (공화국수역에서 단속에 응할 의무)
공화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배는 조선인민군 해군함선과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배
의 단속에 응하여야 한다.
군사행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장 해상수송

제36조 (해상수송계획의 작성과 실행)
해상수송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본임무이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수송계획을 세우고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여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우리 나라 항구들사이의 배수송)
우리 나라 항구들사이의 배수송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맡아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수송에서 집중수송, 편대수송을 강화하며 집
함수송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제38조 (우리 나라 집의 우선 수송)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의 집부터 먼저 실어날라야 한다.
빈배로 항해하거나 체널시키는 일이 없도록 실어나를 집을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제39조 (집수송계약)
해상수송은 집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을 우리 나라 배로 실어나르는 원칙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40조 (용선의뢰)
용선은 용선중개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용선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용선중개기관에 의뢰서를 내야 한다.

제41조 (용선계약)
용선을 의뢰받은 용선중개기관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배로 다른 나라 임을 실어나르러 할 경우에는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직접 다른 나라 당사자와 용선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제42조 (용선계약대상과 내용)
용선계약은 검수량에 따라 배정체 또는 일부 집간을 대상으로 맺는다.
용선계약서에는 배와 임이름, 검수량과 그것을 실거나 부리는 항, 계약조건 같은 것을 밝힌다.

제43조 (용선중개기관의 임무)
용선중개기관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정확히 리행하게 하며 배운임, 체선료, 조출료를 정해진 기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44조 (계약한 배의 보장)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적항까지 임을 안전하게 실어나를수 있는 배 를 정해진 기일까지 임실하는 항에 대하여 한다.
수송계약에서 임을 실거나 부리는 항을 후에 정하기로 한 경우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항을 정하고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 려야 한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합의없이 계약에서 정한 배를 다른 배로 바꾸어 탈수 없다.

제45조 (침문건과 임의 인계)
수송을 의뢰하거나 임을 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의 이름과 수량, 기호, 특성 같은것을 밝히 문건과 실어나를 임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야 한다.
계약에서 정한 임대신 다른 임을 실어보내려 할 경우에는 미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46조 (배의 집배처)
배에서 임의 배치는 선장의 지시에 따른다.
국제해운법규 또는 관례에 따라 간판에 실는 임으로 인정되어있지 않는 임을 간판에 실으려 할 경우에는 임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고 수송문건에 밝힌다.

제47조 (임의 결보기상태, 수량의 확인)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을 넘겨주고 받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임의 결보기상태,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배정중권의 발급과 효력)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배에 실은 다음 짐보내는 기판,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배정중권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정중권을 가지고 있는 기판, 기업소, 단체의 권리의무관계는 배정중권에 따른다. 그린가 배정중권을 가지고 있는 기판, 기업소, 단체가 수송을 의뢰하였거나 배정중권에 수송계약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수송 계약서의 내용이 배정중권의 내용보다 더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9조(징항수송의무)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재진 배길로 목적지까지 직행하여 짐을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사람과 배, 제산의 구조 또는 어차할수 없는 사유로 직행하지 못한것은 배길리탈로 보지 않는다.

제50조(배정중권에 의한 짐인수)
짐받는 기판, 기업소, 단체는 배정중권이 여러부 발급되었을 경우 목적항에서는 1부를 내고 짐을 찾을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배정중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목적항이 아닌 곳에서는 발급된 배정중권을 전부 내야 짐을 찾을수 있다.

제51조(징수송부담금)
짐받는 기판, 기업소, 단체는 배에 배정중권정본을 내고 짐수송과 관련한 부담금을 불여야 짐을 찾을수 있다.

제52조(목적항에 들어갈수 없는 배의 짐처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가 목적항에 들어갈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가 착용한 배에 있는 짐을 부리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잃은 손해와 비용은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상한다.

제53조(배에 실은 위험점의 처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실은 위험점이 사람이 다른 짐에 위험을 줄수 있는 경우 그것을 부리거나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짐의 성질을 정확히 알려지 않고 실은 위험점의 처리비용은 짐보내는 기판,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제54조(짐발율자, 짐부리는 항의 변경)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가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된 다음에도 짐을 돌려주거나 계약한 짐수량, 짐받는 기판, 기업소, 단체 또는 짐부리는 항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임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5조(넘겨받기를 거절, 지체하거나 넘겨받을 당사자가 없는 짐의 처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적항에서 짐받는 기판, 기업소, 단체가 넘겨받기를 거절 또는 지체하거나 짐받을 기판, 기업소, 단체가 없을 경우 짐을 부리 보관시키고 그에 대하여 짐을 받거나 보내는 기판,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집의 보관료와 위험,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은 손해, 해당 이용에 대해서는 집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56조(배운임의 납부)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약에 따라 배운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배운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약된 수량보다 짐을 더 실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 운임을 물어야 한다.
제57조(집의 손실원인에 따르는 배운임의 납부)
집자체의 성질이나 결함, 수송을 의뢰하거나 집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잘못으로 집이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배운임을 전부 부담. 그러나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잘못으로 손실된 집에 대해서는 배운임을 물지 않는다.
제58조(수송계약의 불리행에 대한 책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잘못으로 계약된 짐을 다 실지 못하였거나 짐을 맡아가지고 있는 기간 짐이 손실, 손상되었거나 짐을 제때에 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하여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59조(배관리자가 집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
집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 전쟁 및 적대행위, 해당 당국의 조치를 비롯한 여지없이 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충돌, 좌주를 비롯한 해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집자체의 결함이 있었을 경우
4. 집함이나 그 봉인상태가 정상인 경우
제60조(다른 나라 당사자에 대한 배관리운영자의 책임)
집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다른 나라 당사자앞에 지는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은 국제협약에 따른다. 그러나 국제협약보다 낮은 기준에서 책임을 지게 된 나라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따른다.
제61조(러객수송의 보장)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러객수송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며 러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러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러객은 제정된 배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6장 배에 대한 봉사

제62조(봉사관련법규와 봉사순위)
배에 대한 봉사를 잘하는것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배에 대한 봉사는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르며 그에 정해있지 않은것은 당사자들에 의한다.
배에 대한봉사는 우리 나라 배와 긴급한 물자를 실은 배를 내놓고 항에 들어오는 차례로 한다.

제63조(다른 나라 배의 대리업무)
다른 나라 배에 대한 대리업무는 선박대리기관이 맡아한다.
우리 나라 항과 영해, 공동수역의 우리축 지역에 영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대리업무에 필요한 배와 짐자로, 비용을 선박대리기관에 미리 내야 한다.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선박대리기관과의 협의일에 다른 나라 배와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제64조(배길안내)
항에 나도는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배는 선장의 요구에 따라 배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길안내는 해당할 자격을 가진자가만이 할 수 있다.

제65조(배길안내를 받는 선장의 의무와 책임)
배길안내를 받는 배의 선장은 배길안내원에게 배의 항해 및 조종상특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을 경우에도 선장은 배의 조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66조(배급기작업)
배급기작업은 배를 부두에 대거나 부두에서 멜 때를 비롯한 필요한 경우에 한다.
물류운영기관은 배급기작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배를 보장하여야 한다.
물류는 배의 선장은 물류선장에게 자기 배의 조종상특성과 결함 그밖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67조(배급기작업의 지휘)
배급기작업은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물류는 배의 선장이 지휘한다. 이 경우 지휘를 받는 배의 선장도 물류작업의 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제68조(배급기작업과제에 생긴 손해)
배급기작업과제에 생긴 손해는 그에 잘못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진다.
 잘못을 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급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가 책임진다.
배급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잘못을 일으킨 당사자와 관련적으로 책임진다.
배급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는 배급기작업과제에 생긴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제69조(배의 기술봉사와 물자공급)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에서 요구하는 기술봉사를 하며 연유, 물, 식료품, 남재 같은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70조(배봉. 해난으로 항에 들어온 배와 선원에 대한 방조)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봉과 해난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항에 들어온 배와 선원에게 필요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제7장 해난구조

제71조(해난구조기관과 그 임무)
해난구조는 바다에서 재해를 당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해난구조와 가라앉은 재산을 건지하는 사업은 공화국해난구조
기관이 한다.
중앙해양수자원공단과 해난구조기관은 해난구조체계를 바로세우고 발견된 해난을
제때에 구조하여야 한다.

제72조(해난의 통보)
기판, 기업소, 단체와 배의 선장은 해난을 발견한 즉시 해난구조기관 또는 해당 기
관에 알려야 한다.
해난구조를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제73조(선장의 구조의무)
배의 선장은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과 배를 발견하였거나 조난신호를 받았을
경우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부터 먼저 구원하여야 한다.

제74조(해난구조로의 납부)
해난구조로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의 선장은 해난구조로를 물어야 한다.
기판, 기업소, 단체사이의 해난구조로문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그러나 우
리 나라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의 해난구조로문제는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75조(카라앉은 제산의 구조)
우리 나라 수역에 가라앉은 제산을 건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정해진
기간안에 건지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배충돌시 선장의 임무)
배는 안전한해의 요구를 지켜 충돌사고를 내지 말어야 한다.
배들이 충돌한 경우 선장은 상대측 배의 안정을 도와주며 배이름과 선적함, 떠나
온 항과 목적항을 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7조(배충돌시 잘못에 따르는 책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배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
야 한다.
충돌한 배들이 서로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잘못의 정도를
가할수 없으면 같은 돕으로 손해를 보상한다.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
우에는 현대적으로 책임진다.

제78조(배충돌로 생긴 손해보상)
배충돌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은 그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손실과 비용에 대하여
한다. 그러나 배충돌이 있는 다음 피해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더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79조(공통해손의 보상)
함해증 배와 젊, 운임을 공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으킨 해상손해
는 공동으로 보상한다.
공동해상손해는 구제받은 재산의 임자가 구제된 재산가격에 비례하여 보상한다.

제80조 (공동해손보상청구)
배관관리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동으로 보상하는 해상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1조 (공동해손의 청산)
공동으로 보상하는 해상손해의 청산은 배관관리기관, 기업소, 단체가 지정한
손해청산인이 한다.

항해가 끝난 다음 1개월안으로 배관관리기관, 기업소, 단체가 손해청산인을 지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이 지정할 수 있다.

손해청산인은 국제적으로 정해진 손해청산원칙에 따라 손해를 청산하여야 한다.

제82조 (해난사고의 통보, 인증)
선장은 항해과정에 있은 해난사고에 대하여 배관관리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
사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자기 배의 잘못이 없이 생긴 해난사고에 대하여서는 사고가 있는 다음 처음 도착한
항에서 해당 전진하는 기관 또는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83조 (다른 나라 당사자에게 준 손해의 책임)
배관관리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이 다른 나라 당사자에
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를 입으킨 배의 가격범위에서 보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배의 가격보다 낮은 기준에서 책임을 지게 된 나라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따른다.

제8장 해상보험

제84조 (해상보험의 대상)
해상보험을 실시하는것은 배관관리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기관의 경영활동
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해상보험은 배전과 운임, 임에 의하여 얻어지는 리익, 배, 배운영과 관련되는 리
익, 배관관리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 같은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85조 (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 효력발생시기)
해상보험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계약은 보험에 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신청서를 내고 보험기관이 보험증권을
내주면 맺어진다.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에 드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험료를 묶 때부터 발생한다.

제86조 (제보험과 해상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기관은 해상보험계약에서 부담하게 된 책임을 다시 다른 나라 보험기관의 보
험에 들 수 있다.

보험료를 제때에 물지 않았거나 보험대상에 손해가 생긴것을 알면서 해상보험계
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이행)
해상보험에 든 기판, 기업소, 단체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기판, 기업소, 단체에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물 의무는 넘길 수 없다.

제88조 (수송하는 집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해상보험)
기판, 기업소, 단체는 일정한 기간 배를 통하여 면이어 보내거나 받게 될 집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상보험에 넘길 수 있다.
해상보험계약을 맺은 기판, 기업소, 단체는 집을 보냈거나 그것이 도착할 때마다 집과 배, 배길의 상태, 보험금액에 대하여 끝 보험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89조 (보험대상의 위험변동에 대한 통보와 덧보험료)
해상보험에 들었거나 보험보상을 받는 기판, 기업소, 단체는 보험대상이 달할 수 있는 위험의 변동에 대하여 제때에 보험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험기관은 해상보험대상에 대한 위험이 커진데 대하여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다.

제90조 (보험대상의 손해통지)
해상보험에 들었거나 보험보상을 받은 기판, 기업소, 단체는 보험대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기관에 제때에 알리며 그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의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아 둘어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제91조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
보험보상은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한 위험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한다.

제92조 (보험보상금)
보험보상금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금액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보험보상을 받을 기판, 기업소, 단체는 해상보험대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를 보험기관에 넘기고 보험금액전액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관은 해상보험대상이 손해를 입은 근거자료와 보험증권을 받고 보험보상금을 물어준다.

제93조 (손해보험청구권의 이전)
보험기관은 물어주는 보험보상금의 범위안에서 해상보험대상에 손해를 입으킨 당사자에 대하여 보험보상을 받는 기판, 기업소, 단체가 가지는 손해보험청구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보험보상을 받는 기판, 기업소, 단체는 보험기관이 손해보상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94조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해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방안이다.
국가는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른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95조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명의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배관리운영과 항해, 해상수송, 배취급, 해난사고와 그 구조 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96조 (과학연구사업과 그 성과도입)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해운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적극 풀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운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97조 (해운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금융기관은 해운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98조 (해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해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해와 배의 항해절차준수수정형, 항의 관리운영과 배위급정형 같은것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99조 (해운사업에 대한 영업허가)
선박운영, 선박용선, 해상중계수송, 항을 통한 무역집의 환적 같은 해운업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운업에 대한 영업허가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제100조 (벌금)
배의 임출상, 항해절차를 어겼거나 공화국이 판할하는 수역을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101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항, 갑문시설물과 배결로식물과 파손시켰거나 짐을 손실,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10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해운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공무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킨다.

제10장 분쟁해결

제103조 (분쟁해결방법)
해운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사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제104조 (청구문건의 제출, 청구권보장기간)
분쟁문건을 해결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구문건을 청구권보장기간안에 해사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내야 한다.
청구권보장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우선적인 해사청구권보장기간은 1년이다.
제105조 (법률봉사단체를 통한 청구문건의 제출)
해사중재 또는 재판에서 원고, 피고로 되는 당사자는 공화국법률봉사단체를 통하여 청구문건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나라 당사자는 정해진 법률봉사단체를 통해서만 청구문건을 내야 한다.

법률봉사단체는 해당 법규에 맞게 법률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 (배역처분과 그 집행)
재판기관은 빚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의 책임인에 배와 짐 그밖에 재산을 일정한 기간 억류할 수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재판소의 판정은 재판소 집행원이 집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빚을 근거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였거나 관리 운영하는 배나 재산을 억류할 수 없다.

제107조 (배의 강제판매)
재판기관은 빚을 물지 못하여 억류당한 배가 30일이 지나도록 채무리행납보를 세우지 않거나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빚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으로 그 배를 강제판매시킬 수 있다.

판매대금은 판결 또는 판결에 기초하여 우선적해사청구권의 순위로 몰어주며 나머지는 배임자에게 반환한다.

제108조 (보상책임의 제한)
배의 억류, 해상수송과 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정해진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제한하여줄수 대한 의결을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가 고의 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받을 수 없다.

제109조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의 순위)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인명피해, 로동보수와 관련한 청구권
2. 항만비용과 관련한 청구권
3. 해난구조, 공동부담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4. 항구조물과 설비에 끼친 손해보상, 충돌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5. 짐과 계약상책임에 따르는 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제110조 (우선적인 해사청구권과 저당권, 항차, 청구액의 관계)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은 저당권보다 우선적이다.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에서는 전항차보다 다음항차에 발생한것이 더 우선적이며 같은 항목에서는 그 청구액에 비례한다.

제111조 (분쟁해결의 기준문건)
분쟁해결은 당사자들사이의 계약, 공화국의 해당 법규, 공화국이 승인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짐수송법

주체95(2006)년 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2호로 채택

제1장 해상짐수송법의 기본

제1조(해상짐수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짐수송법은 배에 의한 해상짐수송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해상짐수송의 장려원칙)
해상짐수송을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해상짐수송부문에 대한 투자를 높이며 바다를 통한 짐수송을 적극 장려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보호원칙)
해상짐수송에서 계약당사자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국가는 해상짐수송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4조(해상짐수송에서 신용보장의 원칙)
해상짐수송에서 신용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해상수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해상짐수송계약당사자들이 배와 짐을 정확히 보장하며 집판리와 배운임지불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한다.

제5조(적용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짐수송법은 우리 나라 당사자들사이 또는 우리 나라 당사자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에 해상짐수송계약을 맺고 시행하는 해상짐수송에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과의 관계)
해상짐수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가 속한 해운분야의 국제협약과 관례는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잡수송자

제7조 (잡수송자의 행위)
잡수송자는 수송의뢰자와 해상잡수송계약을 맺은 당사자이다.
해상잡수송과 관련하여 위임된 범위안에서 잡수송자의 대리인이 한 행위는 잡수송자의 행위로 본다.

제8조 (잡수송자의 책임기간)
잡수송자는 집보내는자에게서 잡을 넘겨받은 때부터 집받는자에게 넘겨줄 때까지 그 집에 대하여 배집중전소지자와 책임진다.
배집중전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소지자와 책임 진다.

제9조 (항해의 준비)
잡수송자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까지 집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배의 항해감
당력을 보장하며 선원을 배치하고 집간, 행동간, 행장간 갑을 되돌려야 한다.

제10조 (배선)
잡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를 집신하는 항에 제때에 대야 한다.
어chè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와 배선기밀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 다른 배를 보장하거나 기밀을 연장하여 줄것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2일으로 답변하며 답변이 없으면 잡수송자의 제기에 동의한것으로 
인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잡의 다루기)
잡수송자는 잡의 신기와 쌓기, 고류펴기, 관리, 부리기를 배의 항해와 잡의 안전
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담당자에게 잡의 신기와 쌓기, 고류펴
기, 부리기를 정확히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잡수송자의 요구로 잡을 다루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담당
자가 책임진다.

제12조 (갑판질)
잡을 갑판에 실으러 할 경우 잡수송자와 집보내는자는 합의하고 그 사실을 수송문
건에 밝혀야 한다.
갑판질에 생길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서는 계약에 따라 집보내는자 또는 집받는자
가 부담한다.

제13조 (직항)
잡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목적항까지 직항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정한것이 없을 경우에는 관례적인 항로를 따라 항항한다.
항해도중 인명이나 재산구조 기타 어chè할수 없는 사유로 항로를 달리 정하였을 경
우에는 항로리필로 보지 않는다.
제14조(위험집의 처리)
집수송자는 수송도중 위험성이 있는 집에 의하여 인명이나 배, 집, 환경에 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그것을 파괴하거나 버리는것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집의 넘겨주기)
집수송자는 배가 목적항에 도착하면 집받는자에게 집을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집받는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집을 제때에 넘겨받지 않거나 넘겨받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집받는자가 없을 경우에는 집보내는자에게 알리고 집을 임의의 창고나 장소에 보관시키는것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집수송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비용은 집보내는자 또는 집받는자가 부담한다.

제16조(배짐중권에 의한 집의 넘겨주기)
집수송자는 집을 넘겨주려 할 경우 집받는자로부터 배짐증권정본을 정확히 넘겨 받아야 한다.
목적항이 아닌 곳에서 집을 넘겨주려 할 경우에는 발급된 배짐증권정본 전체를 넘겨 받아야 한다.
배짐증권정본이 없거나 목적항이 아닌 곳에서 배짐증권정본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집을 넘겨줄 수 없다.

제17조(지불담보서에 의한 집의 넘겨주기)
집수송자는 집받는자가 배짐증권을 제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집을 넘겨주어도 된다는 집보내는자의 동의서, 집값에 해당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집받는자와 그가 거래하는 은행의 담보서를 받고 집을 넘겨줄 수 있다.

제18조(집의 류치)
집수송자는 운임이나 비운짐자리운임, 체선료 또는 대기료, 집을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 해난구조비용, 공통해손부담금 같은것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집의 심고부리기를 거절, 중지하거나 실은 집을 류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책임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9조(집의 경매처분)
집수송자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할 날부터 30일안에 지불하지 않았거나 집을 넘겨받아야 할 날부터 30일안에 집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집에 대하여 경매처분하게 줄것을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집이 쉽게 부패변질되거나 집보관비용이 집의 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매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경매처분재권의 분배)
경매처분한 집의 값에서 경매처분에 들인 비용과 집수송자가 받아야 할 돈을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를 집보내는자 또는 집받는자에게 돌려준다.
집수송자는 경매처분한 집의 값이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보자라는 금액을 집보내는자 또는 집받는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522 -
제21조 (집수송자의 책임면제조건)
집수송자가 발생한 집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역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전쟁 및 무장충돌, 적대행위, 해적행위의 경우
2. 경역, 해당 당국의 행정적 및 법적조치의 경우
3. 바다, 항해수역에서 예견할 수 없었던 위험, 사고의 경우
4. 항해 또는 배관에서 선원, 수로안내원의 실수인 경우
5. 집보내는자, 집받는자 또는 그 대리인의 행위인 경우
6. 파업, 작업정지 기타 장애의 경우
7. 집체체의 자성적특성 또는 결합의 경우
8. 집의 포장, 표식이 불량한 경우
9. 배의 솜은 결합인 경우
10. 해난구조행위의 경우
11. 인명, 재산,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예전에 번한 조치의 경우
12. 집수송자의 잘못이 아닌 화재나 기타 원인의 경우

제22조 (책임면제를 받으려는자의 책임책임)
발생한 집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집수송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의 허물이 없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집수송자의 책임제한)
집수송자는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집의 손실, 손상과 관련한 손해보상액을 잡의 포장당, 단위당 666.67SDR 또는 1kg당 2SDR의 금액가운데서 더 높은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집의 넘겨주기지역에 대한 손해보상액은 운임총액으로 제한한다.

제24조 (책임제한권의 상실)
집수송자는 집에 대하여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의 발생을 예전하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제한을 받을 수 없다.

제3장 집보내는자와 받는자

제25조 (집보내는자의 의무)
집보내는자는 수송계약에 따라 실을 집을 집수송자에게 넘겨주고 배짐중전, 해상 운송장 같은 수송문진을 넘겨받는 당사자이다.
집보내는자는 인명이나 재산, 환경에 의해를 주지 않으며 집실키와 보관관리, 부리기에 적합한 집을 집수송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집수송자와 합의없이 계약에서 정한 집을 바꿀 수 없다.

제26조 (집의 표식)
집보내는자는 집수송자에게 넘겨출 집 또는 포장에 주기호, 출발항, 목적항, 경
유항, 집보내는자, 집발는자, 취급주의사항 같은 필요한 표식을 지워지지 않게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집주로의 제공)
집보내는자는 보내려는 집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성질 같은것과 그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집수송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집과 관련한 자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와 비용은 집보내는자가 부담한다.

제28조 (집의 수송수속)
집보내는자는 집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세관검사, 검역, 가객증인 같은 필요한 수속을 제때에 하며 집을 배에 실기 전에 집수송자에게 상신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신의뢰서에는 집보내는자의 이름, 통고인, 집발는자의 이름, 배의 이름, 집신
는 항, 집무리는 항, 집의 최종도착지, 집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성질 기타 필요한 자료, 집의 결보기상태를 밝혀야 한다.

제29조 (설을 집의 보장)
집보내는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안에 집의 실기작업을 끝낼수 있도록 집을 보장
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집의 실기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실기를 중단없이 할수 있도
록 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 (집반환 및 집발는자, 집무리는 항의 변경)
집보내는자는 집을 돌려주거나 집발는자 또는 집무리는 항을 변경시켜줄것을 집수송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집수송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1조 (집보내는자의 책임면제)
집보내는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입은 집수송자 또는 배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32조 (집의 넘겨받기)
집발는자는 집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계약에 따라 집수송자로부터 집을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집수송자와 집발는자는 집의 손실, 손상증상을 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할수 있다. 검사비용은 검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검사비용을 부담한자는 집의 손실, 손상에 책임있는자에게 비용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제33조 (집의 손실, 손상에 대한 통지)
집발는자는 넘겨받은 집이 손실, 손상되었을 경우 집을 넘겨받은 날부터 14일안
에 집수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확인한 집에 대하여서는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수 있다.
정한 기간안에 통지하지 않은 집의 손실, 손상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은 소멸된다.

제34조 (집넘겨주기지연의 통지)
집발는자는 집의 넘겨주기가 지연되었거나 집을 넘겨받지 못하였을 경우 집을 넘겨받아야 할 날부터 30일안에 집수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한 기간안에 통지하지 않은 집의 넘겨주기지연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은 소멸
된다.

제35조(대리인, 배의 선장에게 한 통지의 효력)
집받는자가 집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에 대하여 집수송자의 대리인 또는 배
의 선장에게 한 통지는 집수송자에게 한것으로 인정한다.

제4장 배침증권

제36조(배침증권의 발급)
배침증권은 집수송자가 집을 접수하여 배침증권을 밝혀진대로 수송하고 배침증권
소지자에게 넘겨 준다는 것을 약속하는 수송문건이다.
집수송자는 집보내는자로부터 집을 넘겨받으면 그의 요구에 따라 쌍방이 확인한
항해사인수증에 준하여 배침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배침증권전재신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을 발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7조(대리인에 의한 배침증권 발급)
배침증권은 집수송자의 위임에 따라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은 발급한 배침증권을 집수송자의 승인밀에 집보내는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배침증권에 한 선장의 수표는 집수송자가 수표한것으로 인정한다.

제38조(배침증권의 재발급)
집수송자는 배침증권을 발급한 후에 집보내는자, 집받는자 또는 응선자가 배침
증권을 다시 발급하여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이미 발급한것을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줄 수
있다.
어제할수 없는 사유로 발급한 배침증권을 제때에 회수할수 없을 경우에는 집보내
는자, 집받는자 또는 응선자로부터 정한 기간안에 돌려주겠다는 담보서를 받고 재발
급하여줄 수 있다.

제39조(배침증권의 양도)
지시식으로 발급된 배침증권은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배침증권에 따르는 권리
와 의무도 함께 넘어간다.

제40조(배침증권의 기재내용)
배침증권에 밝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집수송자의 이름
2. 집보내는자의 이름
3. 집받는자의 이름 또는 집도착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이름
4. 배의 이름
5. 집심은 항과 집부리는 항
6. 집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성질 기타 집보내는자가 제공한 자료
7. 집의 겸보기상태
8. 배운임의 지불관계
9. 갓관에 실은 집
10. 배짐중건발급장소와 날자, 부수
11. 집수송자의 수표

제41조(배짐중건의 비교관에 밀칠 내용)
배짐중건을 발급하는 집수송자는 배짐중건에 밀힌 집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또는 겸보기상태 같은것이 넘겨받은 집과 맞지 않거나 맞지 않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배짐중건의 비교관에 밀칠 수 있다.

제42조(결합없는 배짐중건의 효력)
배짐중건의 비교관에 결합을 밀치지 않은 경우에는 집수송자가 집보내는자로부터 배짐중건에 밀힌 상태의 집을 정확히 넘겨받은것으로 인정한다.
결합이 없는 배짐중건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제43조(배짐중건의 앞면과 뒤면기재내용의 효력)
배짐중건의 앞면과 뒤면에 기재한 내용이 서로 모순될 경우에는 앞면의 기재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44조(동과 및 렌대집수송에 따르는 배짐중건의 발급)
해상수송을 포함하는 동과 또는 렌대집수송을 할 경우에는 동과 및 렌대집수송에 따르는 배짐중건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배짐중건은 해상집수송과 관련하여 발급한 배짐중건과 같은 효력이 가진다.

제5장 배의 운임

제45조(배운임의 지불의무)
배의 운임은 집보내는자, 집받는자 또는 용선자가 지불한다.
집보내는자, 집받는자 또는 용선자는 계약에 따라 집수송자에게 배의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6조(배운임의 지불방법)
배의 운임지불은 전불 또는 후불, 총괄지불 같은 방법으로 한다.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없이 배의 운임을 상쇄, 공제, 반환할수 없으며 계약에서 정한 운임을 변경시킬수 없다.

제47조(배운임의 전불)
배의 운임을 전불로 정하였을 경우 집수송자가 집을 넘겨받으면 배의 운임을 지불한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점이 손실,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
한다.
배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집수송자는 집보내는자에게 배집중권을 주지 않울 수 있다.

제48조(배운임의 후불)
배의 운임을 후불로 정하였거나 운임지불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가 목적항에 도착한 다음 집부리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집이 손실,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한다.
입항승인을 받은 배는 목적항에 도착한 배로 인정한다.

제49조(배의 총괄운임)
배의 운임을 총괄로 지불하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실은 집에 관계없이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한다. 그러나 배의 적재능력이 계약에서 정한것보다 모자라 집을 다 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배의 운임에서 얻을 수 있다.

제50조(실지 못한 짐과 더 실은 짐의 운임)
계약한 짐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비운짐자리운임을 지불한다. 계약보다 짐을 더 실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운임을 더 지불한다.

제51조(집보내는자의 계약위반시 배운임의 지불)
집수송자는 여러 집보내는자의 짐을 한배로 수송할 경우 계약기간안에 일부 당사자가 짐을 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정대로 배를 출항시킬수 있다. 이 경우 짐을 실지 못한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제52조(계약취소로 손해를 본 배운임의 보상)
수송의뢰자는 해상결수송계약을 집심의 항에 배가 도착한 다음 출항전에 취소하려할 경우에는 배운임의 3분의 2를, 출항한 다음 취소하려할 경우에는 배운임의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집수송자와 여러 수송의뢰자가 맺은 계약을 전체 또는 일부의 수송의뢰자가 취소하려할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한 배운임의 전액을 보상한다.

제6장 용선

제53조(용선의 형태)
용선은 항차용선, 기간용선, 빈배용선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이 경우 용선중 개인을 통하여 한다.

제54조(배의 보장)
배임자는 계약에서 정한 배 또는 짐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빈배용선계약에 따라 배를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서도 넘겨주어야 한다.
계약한 배를 보장할수 없을 경우에는 용선자와 합의하여 다른 배를 보장할수 있다.
제55조(용선)
용선자는 용선한 배를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맺고 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임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용선계약은 기본용선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6조(용선된 배의 처당, 양도)
배임자는 용선된 배를 처당시키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선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용선된 배를 양도할 경우에는 용선계약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제57조(해난구조비를 지불받을 권리)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용선한 배로 해난구조를 하였을 경우 구조비용에서 구조작업에 드 비용과 제3자에게 준 손해보상액, 구조작업에 동원된 선원의 보수 기타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제58조(용선료의 지불)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배를 보장받은 대가로 배임자에게 용선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용선자의 잘못이 아닌 원인으로 배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배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었거나 배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된 날 또는 마지막소식이 있은 날부터 용선료의 지불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로 지불된 용선료는 배의 리용기간에 따라 반환한다.
제59조(용선한 배의 반환)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배임자에게 배를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배자체의 정상적인 마모와 손상은 합함으로 보지 않는다.
제60조(배반환기간이 지난 후의 배운영)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항차도중 배의 반환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항차를 끝내고 배를 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항차기간을 20일이상 초과할 수 없다.
배의 반환기간이 끝난 다음 발생한 용선료는 계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불한다. 그러나 용선료풀의 시세가 계약에서 정한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1조(용선계약의 취소)
용선계약당사자는 계약상태방이 계약조건을 어겼거나 어지지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리행할 수 없거나 그밖의 계약취소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3일간에 계약상태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용선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규정한 손해보상 또는 분쟁해결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제62조(항차용선)
항차용선은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까지 한방향으로 한 번 항해하거나 두 항구사이를 한 번 또는 여러번 환복으로 항해하면서 짐을 수송하기 위하여 배의 전부 또는 일부 짐칸을 밀리는 행위이다.
응선자는 배의 전부 또는 일부 집간을 빌린 대가로 배임자에게 배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63조 (항차용선계약)
항차용선을 하려는 응선자는 배임자와 항차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항차용선계약서에는 배임자와 응선자의 이름, 배의 이름, 선적항, 항의 무게, 용적, 품명, 집신의 항과 부리는 항, 집신고부리는 기간, 배의 운임, 조출료와 체선료판계, 분쟁해결방법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64조 (기간용선)
기간용선은 응선자가 배임자로부터 선원을 빌려 배를 일정한 기간 빌려 운영하는 행위이다.
기간용선자는 집수송주로서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배의 항해감당력보장과 관련한 의무는 배임자가 진다.

제65조 (기간용선계약)
기간용선을 하려는 응선자는 배임자와 기간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간용선계약서에는 배임자와 응선자의 이름, 배의 이름, 국적, 선급, 총수, 적재능력, 속도, 연료소비, 항해구역, 용도, 용선기간, 배의 보장과 반환시기, 장소, 용선료의 지불조건, 계약종결, 분쟁해결방법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66조 (기간용선자의 지시권한)
기간용선자는 용선한 배의 선장에게 배의 운영, 집수송과 관련한 지시를 준다. 이 경우 배임자와 엮은 계약조건과 어긋나는 지시를 할 수 없다.

제67조 (배임자의 류칙권)
기간용선자가 용선료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배임자는 배에 실은 집파 운선자가 얻은 수입에 대하여 류칙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8조 (빈배용선)
빈배용선은 응선자가 배임자로부터 선원이 없는 배를 일정한 기간 빌려 운영하는 행위이다.
빈배용선자는 집수송주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69조 (빈배용선계약)
빈배용선하려는 응선자는 배임자와 빈배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빈배용선계약서에는 배임자와 응선자의 이름, 배의 이름, 선적항, 선급, 총수, 적재능력, 항해구역, 용도, 용선기간, 배의 보장과 반환시기, 장소, 배의 검사, 관리, 수리, 용선료의 지불조건, 배보험, 계약종결, 분쟁해결방법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70조 (빈배용선자의 의무)
빈배용선자는 용선기간 배의 관리와 수리에 대하여 책임진다.
배의 구조, 기판, 보이어야, 장비 같은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배임자와 협의하여 배를 돌려줄 경우에는 배임자의 요구에 따라 분배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529 -
제71조(빈배용선자의 배보험)
빈배용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계약에서 정한 가격과 방식에 따라 배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7장 분쟁해결

제72조(분쟁해결의 방법)
해상진수송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사중재 또는 제판절차로 한다.

제73조(분쟁해결의 기준)
해상진수송과 관련한 분쟁해결은 당사자들사이에 합의된 계약, 배짐증권소지자가 용선자가 아닐 경우에는 배짐증권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진행한다.
당사자들사이에 합의된 계약과 배짐증권,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것은 해당 법규와 국제협약, 판례에 따른다.

제74조(해사청구권의 시효기간)
해사청구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어제할수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사청구권의 시효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해사청구자가 배역류를 신청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거나 해당 청구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제75조(손해보상청구제기)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를 제판이나 중재에 제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법률봉사단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6조(손해보상청구액의 계산)
손해보상청구액의 계산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항에서 질수송자가 질받는자에게 질을 넘겨줄 당시 거래되는 질값에 준하여 한다.
해당 질의 값을 알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과 류사한 종류와 품질의 질값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

제1장 배길표식법의 기본

제1조 (배길표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은 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절서를 엄격히 세워 배의 안전한 향해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배길표식물의 종류)
배길표식물은 동물, 포양, 색깔, 소리, 전과 같은 것을 리용하여 항만, 연안수역, 하천, 호소에서 배길안내를 위한 기본수단이다.
배길표식물에는 동래, 동간, 동표, 림표, 부표, 도표, 음향신호설비, 무선신호설비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 (배길표식물의 현대화원칙)
배길표식물의 설치는 배길표식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배길표식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배길표식물을 현대화하고 수로항해학적요구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제4조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원칙)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을 바로가는것은 배길표식물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그 기술적성능과 재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을 파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 (배길표식물의 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배길표식물에 대한 파학기술저작권보급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배길표식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배길표식부문의 파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배길표식부문의 파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앞선 파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7조 (배길표식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배길표식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배길표식분야의 국제협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배길표식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배급표식물의 설치

제9조 (배급표식물설치의 기본요구)
배급표식물의 설치를 바로하는 것은 해난사고를 미리 막고 배의 항해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배급표식물설치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배급표식물설치의 담당자)
배급표식물의 설치는 배급표식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하는 배급표식물의 설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1조 (배급표식물설치의 신청)
배급표식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급표식물설치신청서를 만들어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배급표식물신청에는 설치리유, 위치, 종류, 제원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배급표식물설치신청의 심의)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급표식물설치신청서를 1개월안으로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통지서를, 부결한 경우에는 배급표식물신청서에 그 리유를 밝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제13조 (배급표식물설치의 중요요구)
배급표식물의 설치에서 나서는 중요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항해하는 배에서 잘 보여야 한다.
2. 정해진 형태와 색깔, 동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비행과 보임거리, 음향과 무선전파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안전성과 건고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배급표식물설계의 작성)
배급표식물의 설치를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급표식물의 설계를 설계 지도서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배급표식물설계지도서를 만드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제15조 (배급표식물의 설치방법)
배급표식기판,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급표식물의 설치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공법을 지키며 설치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배급표식물의 설치를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6조 (배급표식물의 준공검사)
배급표식물을 설치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배급표식물은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배급표식물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치한 배급표식물을 정한 기간안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배급표식물은 승인없이 철수하거나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다.
제18조 (배급표식물의 설치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급표식물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인원의 출입, 건물 또는 시설물의 철수 같은 배급표식물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
하여야 한다.
제19조 (달라진 배급표식물의 제원통보)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설치하였거나 달라진 배급표식물의 제원을 제때에 수로공보
를 통하여 내보내며 동대표와 해도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3장 배급표식물의 관리운영

제20조 (배급표식물관리운영의 기본요구)
배급표식물의 관리운영은 배급표식기판, 기업소, 단체의 기본업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급표식물의 관리운영을 배급표식물관리운영지도서
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배급표식물관리운영지도서를 만드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제21조 (배급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유지)
배급표식기판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대표에 맞춰서 배급표식물의 성능
과 제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같은 사고로 배급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그것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 (배급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측정)
배급표식기판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급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을 정기적
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달라진 성능과 제원은 국가수로지도기관에 곧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배급표식물의 보수)
배급표식기판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급표식물의 보수주기를 지키며 보
수의 절을 보장하여야 한다.
내용변한이 지났거나 잘못게 된 배급표식물은 제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24조 (배급표식물의 보호구역)
국가는 배급표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급표식물보호구역을 정한다.
배급표식물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5조 (배급표식물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기판,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급표식물보호구역에서 승인없이 시설물을 건설하
거나 토지의 일부에 물고기잡이를 하는것 같은 배급표식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배급표식물의 보호의무)
기판,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급표식물을 적극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배경표식물에 배, 매목 갈은것을 매어요거나 배경표식물을 파손시킬수 있는 거리로 향해할수 없다.

제27조(등불, 음향신호, 무선신호의 사용금지)
기판,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경표식물의 식별에 자강을 줄수 있는 등불, 음향신호, 무선신호 갈은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배경표식물의 사고신고)
배경표식물이 파손되었거나 배경표식물에 이상이 생긴것을 발견한 기판,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수로지도기판 또는 배경표식기판에 곧 알려야 한다.

제29조(배경표식물의 리용료금)
배경표식물을 리용하는 기판,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사업은중앙가격제정기판이 한다.

제4장 배경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0조(배경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배경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배경표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배경표식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1조(배경표식사업지도기판)
배경표식사업에 대한 지도는내각의통일적인 지도명에 국가수로지도기판과 해당 기판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판과 해당 기판은 배경표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배경표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2조(과학기술적지도와 선진기술의 보급)
국가수로지도기판과 해당 기판은 배경표식부문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선진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로력, 자재, 설비,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판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기관은 배경표식부문에 필요한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배경표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판)
배경표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수로지도기판과 해당 감독통제기판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판과 해당 감독통제기판은 배경표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하여야 한다.

제35조(원상복구, 손해보상)
배경표식물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배경표식물의 설치와 관리운영에서 염증한결과를 일으킨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 법
주체93(2004)년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채택

제1장 수로법의 기본

제1조 (수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은 수로의 조사,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리용, 시설물관리에서 제도와 절서를 엄격히 세워 항해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와 군사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수로부문의 투자원칙)
수로사업은 바다와 하천, 호수의 구획과 지형지물을 위치, 특성 같은것을 조사확정하고 통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수로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 정비화하도록 한다.

제3조 (수로의 조사원칙)
국가는 수로의 조사사업을 전망성있게 과학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4조 (수로통보원칙)
국가는 수로자료의 출판질서를 바로세우고 수로공보, 무선항해경보 같은 통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수로자료의 리용원칙)
국가는 출판된 수로자료를 안전한 항해와 인민경제발전에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 (수로시설물의 관리원칙)
국가는 수로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세우고 관리방법을 끝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제7조 (수로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수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8조 (국제수로협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수로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수로의 조사

제9조(수로조사의 기본요구)
수로의 조사는 수로사업의 성립공정이다.
수로조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수로조사계획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누어 세워야 한다.

제10조(수로의 조사방법)
수로의 조사는 수로측량과 해양관측의 방법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공중관측, 기구관측 같은 방법으로도 수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로측량기관, 기업소의 의무)
수로측량은 수로측량기관, 기업소가 한다.
수로측량기관, 기업소는 바다와 하천, 호수의 수로항해학적요소들과 자연지리적
상태 같은것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해양관측기관, 기업소의 의무)
해양관측은 해양관측기관, 기업소가 한다.
해양관측기관, 기업소는 바다와의 물리화학적성질과 구성, 바다도움, 미세물, 물
결의 특성 같은것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제13조(해도전반의 수로조사기관, 기업소)
해도를 전반하기 위한 수로조사는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 수로
조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일반해도전반을 위한 수로조사는 그것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 수 있다.

제14조(수로조사집행계획서, 기술지도서의 작성)
수로를 조사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대상에 따르는 집행계획서, 기술지도
서를 만들어야 한다.
집행계획서, 기술지도서에는 수로조사의 목적, 수역, 기간, 기술적내용과 방법,
정확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수로조사자료의 보장)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를 정해진 기간에 적절으로 하여야 한다.
수로조사자료는 검사를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수로자료는 리용할 수 없다.

제16조(기술기재의 준비)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에 필요한 베타를 비롯한 기술기재를 갖
추어야 한다.
기술기재에는 정해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기재의 검정)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항 수로조사에 쓰이는 기술기재를 정상적으로 검정
하여야 한다.

- 536 -
점검에서 합격되지 못한 기술기체는 수로조사에 리용할 수 없다.
제18조 (수로조사일군의 자격)
수로조사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해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일군은 수로조사를 할 수 없다.
제19조 (표준조사작법의 준수)
수로조사일군은 수로조사에서 표준조사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표준조사작법을 만드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제20조 (수로변화상태의 조사)
수로조사기관, 기업체와 해당 기관은 수로의 변화상태를 장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
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조사한 수로자료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로조사조건의 보장)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체는 해당 기관, 기업체, 단체와 공민에게 수로조사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할 수 있다.
기관, 기업체, 단체와 공민은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체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로조사시설의 제출과 승인)
자체로 수로조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체, 단체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 수로조사시설
설립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로조사시설에는 수로조사의 목적, 대상, 기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3장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제23조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의 기본요구)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를 바르고하는 것은 안전한 항해와 바다자원의 개발리용을 원
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수로자료에는 해도와 수로지, 수로예보 같은 항해참고자료와 수로공보, 무선항해
정보 같은것이 속한다.
제24조 (해도와 항해참고자료의 편집발행계획)
해도와 항해참고자료의 편집발행기관은 해도와 항해참고자료에 대한 수요와 현실
적조건을 타당하여 편집발행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여김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해도의 출판)
해도의 출판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정한 해도출판기관이 한다.
해도출판기관은 해도의 편집지도서를 작성하고 편집인도와 출판인도를 만들어야
한다.
'편집지도서와 편집인도, 출판인도는 국가수로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제26조 (해도, 항해참고자료의 발행)
해도와 항해참고자료를 인쇄하거나 발행하려 할 경우에는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를 받는다.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는 국가수로지도기판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7조 (해도, 항해참고자료의 배포)
인쇄한 해도, 항해참고자료는 검사와 배포승인을 받는다.
검사와 배포승인은 국가수로지도기판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8조 (수로공보와 무선항해경보)
국가수로지도기판은 수로공보, 무선항해경보체계를 바로세우고 수로공보 또는 무선항해경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29조 (항해자료의 배포)
배급표시, 항해위험물의 변경 같은 항해자료는 수로공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내보낸다.
수로공보의 배포단위 또는 무선공보단위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판이 한다.
제30조 (긴요한 항해자료의 경보)
긴요한 항해자료는 무선항해경보로 내보낸다.
무선항해경보는 긴급항해경보와 일반항해경보로 나누어 한다.
제31조 (긴급항해경보)
긴급항해경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저화산, 지진 같은 위급한 자연현상이 예전될 경우
2. 비행물체가 떨어질것이 예전될 경우
3. 충돌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있을 경우
4. 떠나는 기뢰 같은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5. 항해하는 배에 급히 중대한 위험이 닥쳐올수 있을 경우
6. 그밖에 긴급히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경우
제32조 (일반항해경보)
일반항해경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암초 같은 항해위험물을 새로 발견하였을 경우
2. 가라앉은 배 또는 그 표식을 발견하였을 경우
3. 알수 없는 물체가 떠있는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4. 조간당한 배를 발견하였을 경우
5. 좁은 수역안에서 규모가 큰 배 또는 여러척의 배가 항해하고있을 경우
6. 배길표식물의 설치, 철수, 동결의 변화가 있을 경우
7. 배길의 변경과 봉쇄가 예전될 경우
8. 해일, 태풍 같은 현상이 예전될 경우
9. 그밖에 항해에 영향을 줄수 있는 현상이 있을 경우
제33조 (새로 발견한 항해자료의 통보)
배의 선장은 항해수역에서 새로 발견하였거나 달라진 항해자료를 정리하여 국가수로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수로자료의 리용

제34조 (수로자료리용의 기본요구)
수로자료의 리용은 출판된 해도와 항해참고자료, 수로자료통보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자료의 특성에 맞게 보관실을 꾸리고 수로자료리용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수로자료리용신청서의 제출)
수로자료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자료리용신청서를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자료리용신청서를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36조 (수로자료의 열람, 대출)
수로자료의 리용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열람, 대출할 수 있다.
열람은 열람실에서만 하며 대출하는 수로자료는 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37조 (수로자료의 리용)
수로자료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자료를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수로자료를 다른 목적에 리용할 수 없다.

제38조 (수로자료의 대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하는 수로자료를 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고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수로자료의 반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수로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바쳐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람, 대출한 수로자료를 정확히 회수하여야 한다.

제40조 (수로자료의 동록)
기관, 기업소, 단체에 배포된 수로자료는 기요문서로 동록하고 리용한다. 그러나 일반항해참고자료 같은 것은 기요문서로 동록하지 않고 리용할 수 있다.
제41조 (수로자료의 기밀엄수)
수로자료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체, 단체는 기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공민은 리용과정에 알게 된 수로자료의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2조 (수로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가는 절서)
수로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 기업체, 단체와 공민은 국가수로지도기판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수로시설물의 관리

제43조 (수로시설물관리의 기본요구)
수로시설물의 관리를 잘하는 것은 수로시설물의 파손을 막고 그 수명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수로기업, 기업체, 단체는 수로시설물을 그 규격과 기술적요구, 안전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 (수로시설물의 종류)
수로시설물에는 국가수로측량기점과 부동표식물, 배길표식물, 수위 또는 해양관측설비 같은것이 속한다.
수로기업, 기업체는 수로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관리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제45조 (수로시설물의 관리기관)
수로시설물의 관리는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분담한 기관, 기업체,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체, 단체는 분담받은 수로시설물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물리화학적특성과 관리기술적요구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수로시설물의 관리의무)
기관, 기업체, 단체와 공민은 수로시설물을 애호관리하여야 한다.
파손, 허락된 수로시설물만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체, 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47조 (수로시설물의 변경)
수로시설물의 규격과 위치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수로시설물의 규격과 위치를 변경시키려는 기관, 기업체, 단체는 국가수로지도기판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수로시설물보존실태의 보고)
해당 기관, 기업체, 단체는 해마다 수로시설물의 보존실태를 보고장약하여 그 정형을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수로시설물의 리용)
국가수로측량기점 같은 수로시설물은 기관, 기업체, 단체가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0조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수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1조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착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 (수로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수로사업에 필요한 로역,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 (수로부문의 과학연구와 기술자, 전문가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수로연구기술을 토대히 꾸리고 수로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수로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4조 (수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수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55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수로의 조사, 자료출판과 보고, 리용, 시설물의 관리를 잘못하여 로역과 자재를 랜비하였거나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6조 (중지)

승인없이 수로자료를 리용하였거나 그 기밀을 누설시킨 경우에는 수로자료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제5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수로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 만 법

주체75(1986)년 9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1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제1장 항만법의 기본

제1조(항만의 지위와 리용목적)
항만은 나라의 관문이며 근로대중의 참조적료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귀중한 재부
이다.
국가는 항만을 전적으로 인민경제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리용하도록 한다.

제2조(항만개발리용원칙)
항만을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항만을 개전확장하며 새로운 항만을 건망성
있게 건설하도록 한다.

제3조(항만관리원칙)
항만관리는 항의 정상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항만에서 제도와 절서를 바로세우고 항만 설비와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파
피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4조(항운영원칙)
항운영을 잘하는 것은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에 맞게 항통좌량을 늘이기 위
한 결정적조건이다.
국가는 항운영체계를 개선하며 항사업을 단일화, 정규화, 규범화한다.

제5조(항에서 봉사원칙)
항에서 봉사사업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항봉사시설을 잘 꾸리고 배와 선원, 렌객에 대한 봉사활동을 적극 벌리도
록 한다.

제6조(항만분야의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항만진설과 관리, 항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
업에 큰 힘을 넣는다.
제7조 (항만분야의 대외활동원칙)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항만업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항만관계 국제협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항만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항만건설

제9조 (항만건설계획의 작성)
항만을 개발확장하며 전망상 있게 건설하는 것은 항의 배내는 능력과 접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운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항만건설계획을 세우고 항만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0조 (항만설계)
항만설계기관은 항을 통과하게 되는 집의 종류와 류동방향, 지형지질조건, 기상수문조건, 해양조건 같은 것을 정확히 조사장악하고 항만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11조 (항만설성기관)
항만건설은 건설주기관이 직접 하거나 건설주기관과 시공주기관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시공주기관은 승인된 설계와 시공계약의 요구대로 건설대상을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2조 (항만구조물건설)
항에는 물결막이폭, 부두를 비롯한 항만구조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항만구조물은 배의 정박과 항행에 지장이 없고 배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신고부리는 설비와 운반설비의 설치)
항에는 기중기, 자행선, 수송관, 벨트콘rete 같은 장을 신고부리거나 나르는데 필요한 설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제14조 (항고, 적재장건설)
항에는 항의 규모와 특성, 접통과능력에 맞게 항고와 적재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무역항의 중계항고와 적재장은 항에서 멀어진 곳에 건설하여야 한다.

제15조 (항 철길, 룸환도로의 건설)
항에는 배정작업에 유리하고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일 수 있게 철길을 건설하며
집운반수단이 늘어나는데 맞게 룸환도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제16조 (배급표식물의 설치)
항에는 동물의 비트한 배급표식물을 수로학적요구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규모가 큰 항에는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와 해양 및 기상관측설비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제17조 (여항시설)
여항에는 물교기부림시설과 가공시설, 저장시설을 잘 두려야 한다.
큰 여항에는 랜팅공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18조 (객객항시설)
객객을 취급하는 항에는 배에 의한 레객수송을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레객부두와 여가지 분사시설을 잘 두려야 한다.

제19조 ( 항관설물의 준공검사 )
시공주기관은 항관건설이 끝난 다음 건설물을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설주기관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제20조 ( 항관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의 보장 )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항관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계획에 정확히 맞추고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항만관리

제21조 ( 항만관리의 기본요구 )
항만관리사업을 잘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의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만에 세워진 제도와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항만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제22조 ( 항만의 경제 )
항만경제를 극한 사업은 내각 또는 지방정부기관이 한다.

제23조 ( 항만에 대한 관리분담 )
항만관리는 항운영기관이 한다.
한개 항만을 여러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내각이 정해주는데 따라 관리한다.

제24조 ( 항만시설물에 대한 기술감정과 보수 )
항운영기관은 물결막이속 같은 항만시설물에 대한 기술감정을 정상적으로 하며 파손된 항만시설물을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25조 ( 배터와 배길의 준결 )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항만의 배터와 배길을 정상적으로 준결하여 배의 안전한 정박과 항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 544 -
항만수역에서 준침, 인양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6조(실고부리는 설비, 운반설비의 수리정비)
항운영기관은 실을 실고부리거나 나르는 설비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제때에 질적으로 수리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제27조(창고와 적재장의 보수정비)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창고와 적재장을 보수계획에 맞설려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창고와 적재장에는 통로와 집사를 구역을 정하고 집을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항 철길과 도로의 보수정비)
철도운수기관과 항운영기관은 항에 있는 철길과 도로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진を目과 교통이 복잡한 곳에는 안전대책을 세워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9조(항운영시설의 보수정비)
항운영기관은 물과 연유공급, 상하수도, 전력공급시설 같은 항운영시설을 잘 구리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30조(배길표식물,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 해양 및 관측 설비의 관리)
배길표식기관과 항운영기관,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물,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와 해양 및 기상관측설비를 현대화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길표식물 같은 설비를 파손시켜 배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항수리기지)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무역항 같은 중요항에 수리기지를 틀로를 꾸려야 한다.
제32조(항구비관리)
항운영기관은 부두를 비롯한 항구내를 잘 포장하고 넓 알돌하게 거두어야 한다.
지방정부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주변을 특화하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항관리운영과 관련이 없는 건설의 제한)
항만에는 항관리운영과 관련이 없는 건물과 시설물을 두거나 건설할 수 없다.
항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만에 건물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려 하거나 항만의 건물과 시설물을 없애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항수역의 오염방지)
항수역에 공업폐설울, 독이 있거나 어지러운 물질을 버리거나 훼 поряд울 수 없다.
배는 항수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있을 경우 오물과 버림물, 기름을 버리거나 덮기지 말아야 한다.
제35조 (항만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만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폭발물을 떠치거나 항만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어야 한다.

제36조 (설비, 시설물, 물자의 보호)
항운영기관과 항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에 있는 설비, 시설물과 물자를 환재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연유를 비롯한 인화성물질과 폭발성물질을 다루는 일은 정해진 부두 또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37조 (다른 나라 배의 입출항)
다른 나라 배는 법이 따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항에 어느때든지 나들수 있다.

제38조 (다른 나라 배의 공화국간기에의무)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오려는 다른 나라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달아야 한다.

제39조 (항운영기관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
항에 나드는 배는 항운영기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국제해상통돌에방규칙과 해당 수역의 항해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40조 (항에 들어온 배의 안전보장)
항운영기관은 항에 들어온 배의 머무름터를 정하여야으며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장으로부터 배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끝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1조 (배를 대고배는 질서)
배는 부두에 대고배는 질서를 지키며 항만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배내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물결막이목, 호안에 배를 대거나 짐을 부릴수 없다.

제42조 (항만에서 축심, 전파탐지, 무선통신기계의 사용금지)
다른 나라 배는 항만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축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 (공민의 항출입절차준수의무)
공민은 항출입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항에 나들거나 배에 오르내릴수 없다.

제44조 (안전항해와 해난구조)
항운영기관은 항수역에서 배의 안전항해와 해난구조를 위한 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항에 머무르는 배는 해난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항운영기관에 알리며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난구조작업에 동원되어야 한다.

- 546 -
제4장 항운영

제45조(배머무름시간단축의무)
항은 해상수송의 거점이다.
항기관계항은 짐을 제때에 신평부리며 배에 대한 기술봉사를 잘하여 배의 머무름시간을 줄여야 한다.

제46조(보상설항련합위원회)
항운영에서 기본은 배취급이다.
배취급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하여 무역항에 비상설로 항련합위원회를 둔다.

제47조(신평부리는 작업기준항을 정하는 기관)
무역항에서 배에 짐을 실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작업기준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8조(작업계약의 체결과 리행)
항기관계는 짐입자래기관계 또는 배입자래기관계에 작업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49조(배취급순위)
배의 취급은 우리 나라 배와 긴급한 사정이 있는 배를 내놓고 항에 들어오는 차례로 한다.

제50조(대리기관을 통한 다른 나라 배와의 사업)
무역항에서 관계기관은 배임자래기관계와 합의일에 다른 나라 배와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임출항승인)
배의 임출항승인은 항무감독기관이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배운영기관 또는 배임자래기관계로부터 배의 임출항신청을 받으면 배에 대한 검사와 배김안내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52조(임출항검사)
다른 나라 배와 우리 나라 무역배는 임출항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출항검사는 항무감독기관의 지휘에 항에 있는 해당 검사기관이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배는 임출항할 수 없다.

제53조(배김안내)
무역항에 내드는 다른 나라 배는 배김안내거래지침으로부터 배김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김안내는 배김안내기관이 한다.
우리 나라 배에 대한 배김안내는 선장의 요구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54조(작업준비완료통지서제출)
항에 들어온 배의 선장은 항련합검사가 끝난 다음 로동안전대책과 작업준비를 졸내이고 작업준비완료통지서를 짐임자래기관계에 내야 한다.
제55조 (짐보증기착업)
항에 짐을 모는 일은 잔임자기기관이 한다.
잠임자기기관은 배선계획에 맞도록 배짐작업에 짐의 잔를 모아야 한다.

제56조 (짐착업의뢰)
짐착업은 잔임자매기기관 또는 배임자매기기관이 본 잔착업의뢰서에 의하여 한다.
짐착업의뢰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내야 한다.

제57조 (신고부리는 작업)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일은 잔적제도면과 잔착업기술공정표, 잔취급제도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항기관은 짐을 신고부리거나 싣어나르는 일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제58조 (수입품을 보내는 사업)
항에서 수입품을 수요자기기관에 보내는 일은 잔임자매기기관이 한다.
잠임자매기기관은 수입품을 제때에 수요자기기관에 보내야 한다.
수입기관은 수입품을 싣어나르는데 필요한 화차와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 (짐의 보관과 처리)
항안에는 짐을 오래 쌓아둘 수 없다.
잠임자기기관은 배에 싣을 짐과 배에서 부린 짐을 항안에 림시로 보관시킬 수 있다.
짐을 보관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
항기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보관시킨 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60조 (짐의 넘겨주고 받기)
항에서 짐을 넘겨주고 받는 것은 운수기관과 잔임자매기기관사이, 잔임자매기기관과 항기관사이에 한다.
짐을 넘겨받은 기관은 넘겨줄 때까지의 기간에 자기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61조 (짐검수와 배장검정)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배의 검수는 국가검수기관이 하며 더미집에 대한 배장검정은 대외상품검사기관이 한다.
국가검수기관과 대외상품검사기관은 점검수와 배장검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62조 (배운영물자와 식료품보장)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물, 연유, 부속품을 비롯한 배운영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대외봉사기관은 선원들에게 충분하고 문화적인 휴식조건을 지어주며 남새를 비롯한 식료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3조 (항만비용의 청산)
항만비용의 계산과 청산은 배가 항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마다 한다.
다른 나라 배운영기관은 항만비용전도금을 배가 항에 도착하기 전에 지정된 은행
의 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제64조 (국내운수항, 공업항, 여항, 력객항의 운영)
국내운수항, 공업항, 여항, 력객항의 운영은 따로 정한 법인에 따른다.

제5장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5조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항만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담보
이다.

해당 기관은 항만건설과 관리, 항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
야 한다.

제66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배물보호시설, 항만시설과 시설물을 손상, 파괴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7조 (벌금)
공업폐설비, 오물, 독이 있는 물질, 버림물, 기름으로 항수역을 매우거나 오염시
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68조 (기체와 배물수)
항만에서 다른 나라 배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쓰임, 전파받지 및 무선통신기계
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재 또는 배를 물수할 수 있다.

제69조 (배와 인원의 억류)
항만에 세워진 제도와 길사를 지키지 않은것과 관련한 벌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물
지 않거나 항만비용의 지불을 거절할 경우에는 해당 배 또는 사람을 억류할 수 있다.

제7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항만건설과 관리, 항운영에 업종의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관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

제1장 배등록법의 기본

제1조(배등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은 배등록과 관련한 사업에서 제도와 절서를 엄격히 세워 배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원만히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배등록의무)
배등록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배등록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등록된 배의 법적보호)
국가는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4조(국기계양)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한다.

제5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배등록기관과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 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배등록의 제외대상)
군함 및 경비용배에는 이 법에 따르는 배등록을 하지 않는다.
총톤수가 5미만의 기계배와 배길이 12m미만의 작은 배에 대한 등록은 따로 정한데 따르다.

제7조(배등록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배등록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배등록의 신청

제8조(배등록신청의 기본요구)
배등록의 신청은 배등록사업의 첫 공정이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3에 배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신청대상의 배)

다음의 배는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배
2.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가 협정, 합작하여 운영하는 배
3.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배

제10조 (배등록의 신청)

배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배등록신청은 중앙해사감독기관에 한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해사대표기관에 직접 할수도 있다.

제11조 (배등록신청의 구분)

배등록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한다.
1. 새로 건조하였거나 구입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첫 배등록신청을 한다.
2.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배이름, 선적항, 소유관계, 배구조를 알은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배의 변경등록신청을 한다.
3. 대부상환 또는 기타 채무리행당보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배의 저당등록 신청을 한다.
4. 빌배용선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빌배용선등록신청을 한다.
5. 배의 등록판함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배의 전출 및 전입등록신청을 한다.

제12조 (배등록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

배등록신청문건에는 배의 이름, 선적항, 종류, 톤수, 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호출부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기술제원 알은것을 밝히며 배등록신청목적과 내용에 따라 배무관련증서, 배등록재료증서, 배영역기록부, 배매매증서, 채무관련증서, 공중기관장관서, 계약서, 구조변경문서와 같은 문건을 첨부 한다.

제13조 (배등록신청문건의 반송)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신청문건에 밝혀야 할 기재사항이 없거나 틀리거나 첨부하여야 할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문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

배등록신청문건을 돌려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결합을 퇴치하고 배등록신청을 다시 할수 있다.

제14조 (배등록의 삭제신청)

우리 나라에 등록하였던 배를 국적제적, 배의 행방불명 또는 침몰, 배선 길은 리유로 삭제하려 할 경우에는 배등록삭제신청문건을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신청문건에 배의 이름과 등록번호, 종류, 톤수, 사용년한, 신청리유, 채권채무관계 알은것을 밝히며 해당한 증명문건을 첨부한다.

- 551 -
제3장 배등록의 심의

제15조(배등록의 심의의 기본요강)
배등록의 심의는 배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심중성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배등록의 심의)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배등록심의는 국제협력하는 배와 국내협력하는 배의 등록을 위한 심의와 배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한 심의로 구분하여 한다.
구체적인 배등록심의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바 따른다.

제17조(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배등록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배의 토수측정)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할 경우 해당 배의 토수측정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국제협력하는 배의 토수측정은 배뿐만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하며 국내협력하는 배의 토수측정은 국내토수측정규정에 따라 한다.

제19조(배등록의 승인 또는 부결)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한 경우 해당 배의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배등록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배등록의 부결통지를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힌다.

제20조(등록할수 없는 배)
다음의 배는 등록할수 없다.
1. 항해감당력이 닦보되지 않은 배
2. 해양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배

제21조(배등록의 재심의제기)
배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심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의 재심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1개월안으로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의견제기)
배등록의 심의결과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해사감독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552 -
제23조 (배의 등록)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이 승인된 배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이름, 선적항, 종류, 톤수, 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등록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 번호, 해상이동복사식적번호, 기술제된, 채취재무관계, 등록날자 같은것을 밝힌다.
등록하지 않은 배는 항해할 수 없다.

제24조 (배등록의 구분)
배는 국제항해배와 국내항해배로 나누어 등록한다.

제25조 (공화국국적소유)
우리 나라는 등록된 배는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 배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26조 (우리 나라 수역에서 경제활동)
공화국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나라 배는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 과학 연구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약이 있음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 (등록된 배의 표식과 기술검사)
배를 등록한 기관, 기업체, 단체는 국가와 배의 이름, 선적항, 국제해사기구번호, 관계검사기관 월면것을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표식하여야 한다.

배기술검사는 정기적으로 받는다.

제28조 (등록된 배의 법규준수의무)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공화국의 해당 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사관련국제 협약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체, 단체는 운영상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를 등록에서 삭제 또는 정지시켰다 할지라도 공화국의 법적권리와 의무를 지킨다.

제29조 (배등록의 정지)
전파용선계약에 따라 우리 나라 배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어 다른 나라 국적으로 운영하여 할 경우에는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체, 단체의 신청에 따라 전파용선하는 기간 그 배의 등록을 정지시킨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을 정지시킨다는 서면 통지를 받을수 있다.

제30조 (배등록의 삭제)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삭제가 승인된 배를 배등록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배등록을 혼란으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배등록을 삭제한다.

제4장 배등록증서

제31조 (배등록증서와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등록한 배에 배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등록증서에는 배의 이름, 국적, 선적항, 소유관계, 등록날자, 종류, 톤수 및 기술제원, 발급날자, 유효기간 같은것을 밝힌다.
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32조(림시배등록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배를 새로 구입하였거나 배등록증서가 만기되었거나 배의 등록관 할이 달라진것으로 하여 배등록증서가 없이 향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배에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림시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1~6개월이다.
제33조(배등록증서의 제발급)
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그것을 분실, 오손되었거나 회수당하였을 경우에는 제발로 신청하여 제발급받아야 한다.
제34조(배의 항해)
배는 해사감독기관에서 발급한 배등록증서 또는 림시배등록증서가 있어야 항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건조하였거나 수리한 배에 대한 시운전을 하려 하거나 기타 불가 피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배등록증서나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받기 전이라도 해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 수 있다.
제35조(배등록색제증서)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을 착제하였을 경우 배등록색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이 착제된 배의 등록증서를 제발에 해사 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6조(배이름과 선적항, 해당 번호, 부호의 지정)
배이름과 선적항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사감독기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배의 등록번호와 등록증서발급번호는 해사감독기관이, 배호출부호와 해상이동통
사시별번호는 전파감독기관이 정한다.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밀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사업체와의 절리를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배등록자료의 구비)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의 등록처수, 등록문서, 배기관출력 및 배수송능력 같은 배등록과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해당 기관이나 국제해사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해사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배등록과 관련한 보증을 한다.
제40조(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등록의 신청과 심의, 배등록증서발급 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배등록증서회수)
비법적으로 배등록증서를 발급받았거나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제42조(항해증지)
배등록을 하지 않고 항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의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억류할 수 있다.
제4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률에 의거 배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

제1장 배안전법의 기본

제1조 (배안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은 배의 설계 및 전조, 검사, 안전관리와 안전 보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에서 제도와 절서를 엄격히 세워 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 바지한다.

제2조 (배의 설계 및 전조원칙)
배의 설계와 전조를 바로하는것은 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요지이다.
국가는 배의 설계와 전조에서 선급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 (배의 검사원칙)
배의 검사는 배의 기술적상태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배검사를 현대화, 과학화하여 배검사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원칙)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은 바다에서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다.
국가는 배의 안전관리, 안전보장체계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제5조 (다른 나라 배의 검열원칙)
다른 나라 배의 검열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가 공화국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요구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지이다.
국가는 다른 나라 배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6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배를 설계, 전조, 개조, 수리하거나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생산, 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2.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
3. 해사감독 및 항운영기관
4.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조선선급을 가진 다른 나라 배
제2장 배의 설계 및 건조

제9조 (배설계의 구분)
배설계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 또는 설비, 의장품의 제작을 위한 선형공정이다.
배설계에는 배의 건조설계, 개조 및 수리설계, 설비설계, 의장품설계 같은것이 속한다.

제10조 (배설계의 담당자)
배설계는 전문배설계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배의 설비, 의장품 같은것에 대한 설계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할 수도 있다.

제11조 (배설계의 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배설계의 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충분한 세기와 불침몰성, 복원성을 보장할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출을 줄이고 설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5. 기타 선급규정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설계계약)
배설계를 주문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설계기관, 기업소와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대상에 따르는 기술과제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배설계의 단계)
배설계는 파경설계, 초기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 총화설계단계로 나누어 작성한다.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단계에 따르는 절차와 방법,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4조 (표준설계문건의 리용)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배설계작성에 표준화, 규격화된 설계문건을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배설계심의의무)
배설계는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는다.
해사감독기관의 설계심의를 받지 않고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배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할 수 없다.

제16조(배설계심의신청)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가 완성되면 해사감독기관에 배설계심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배설계문건과 도면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배설계심의)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를 심의하는 경우 선급규정의 요구에 맞게 설계되었는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의 설계심의는 해당 나라의 해사법규와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한다.

제18조(배설계의 유효기간)
해사감독기관은 승인한 배설계의 유효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배설계는 리용할 수 없다.

제19조(설계와 표준조작법의 요구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는 경우 설계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설비, 의장품의 설치 및 시험과 운용 같은것은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기능공만이 할 수 있다.

제20조(성능검사시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는 과정에 작업공정별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성능검사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 및 의장품에 대한 성능검사시험은 그것을 배에 설치한 다음 하여야 한다.

제21조(배설계의 수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설계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기관, 기업소는 수정한 설계내용에 대하여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계획 및 향해시운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가 끝나면 계획 및 향해시운전을 진행하고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총화설계)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가 완성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총화설계를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아 다음 배소유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 주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총화설계문건은 배소유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없다.

제24조(배의 설비)
배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선급규정의 요구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기관 및 기계장치
3. 접기설비
4. 화재방지설비
5. 구명설비
6. 항해안전설비
7. 조라, 계류, 양보설비
8. 오염방지설비
9. 생활보장설비
10. 이밖에 해사감독기관이 정한 설비

제25조 (판재장갑선의 표식)
배는 판재장갑선을 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항해하는 배는 판재장갑선에 관한 국외협약, 국내항해하는 배는 선급규정에 따라 판재장갑선을 표식한다.

제26조 (판재장갑선을 표식하는 배)
판재장갑선을 표식하는 배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하는 배
2. 길이 24m이상의 배
3. 길이 24m미만의 배로서 13명이상의 력객을 수송하는 배
4. 이밖에 해사감독기관이 정한 배

제27조 (배톤수의 제정)
배는 폭수를 제정받아야 한다.
국외항해하는 배의 폭수제정은 배톤수측정에 관한 국외협약에 따라 하며 국내항해하는 배의 폭수제정은 배론수측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다.

제28조 (무선설비)
국외항해하는 력객선과 총톤수 300이상의 배는 해상조난안전체계에 따르는 무선설비를 갖추며 총톤수 300이하의 배는 해사감독기관이 정한 무선설비를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갖추어야 한다.

제29조 (발명, 창의고안의 도입)
배 또는 배설계에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새로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3장 배의 검사

제30조 (배검사의 담당자와 구분)
배는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의 검사는 제조검사와 운항검사로 나누어 한다.
제조검사는 건조하는 배, 운항검사는 운항하는 배에 대하여 한다.

제31조 (배검사의 신청)
배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에 배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을 한다.

제32조(해상검사와 운항검사)
해상검사에서는 예비검사, 공정검사, 시운전검사를, 운항검사에서는 초기검사,
날차검사, 중간검사, 개선검사를 한다.
필요에 따라 운항하는 배에 대한 추가검사를 할 수도 있다.
검사종류에 따른 검사내용과 방법은 따로 정함에 따른다.

제33조(림시운항검사)
해상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하기전에 항해하려 하거나 양도 또는
검사, 톤수측정, 개조, 수리, 폐선할 목적으로 항해하려는 배에 대하여 림시운항검
사를 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나라에서 배의 검사)
공화국령역 밖에서 항해하고 있는 배에 대한 검사는 공화국해사대표기관이
한다.
공화국해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직접 하거나 중앙해사
감독기관이 지정하는 다른 나라 검사기관이 할 수 있다.

제35조(배증서의 발급)
해상감독기관은 검사에서 합격된 배에 대상에 따라 선급증서, 협약증서, 운항증
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증서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주어야 한다.
림시운항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림시운항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는 배증서를 항상 갖추고있어야 한다.

제36조(배검사에 대한 의견제기)
배검사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견이 있을 경우 해상감독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배검사에 대한 의견을 제기받은 해상감독기관은 제때에 료해처리하고 의견을 제
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배증서의 제발급)
배는 배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되었을 경우 해상감독기관에 제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해상감독기관은 신청리유를 정확히 검토하고 배증서를 제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배증서의 반환)
배가 실종, 철물, 폐선 또는 판매되었거나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에
는 배증서를 해상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9조(선급제정)
배는 해당한 검사를 받은 다음 구조적, 기술적, 운영적특성에 따른 선급을 제정
받아야 한다.
선급을 제정하는 사업은 해상감독기관이 한다.
제40조(변경승인)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경사를 받은 다음 배와 배설비의 형태, 구조, 재료 를 변경하려 할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검사원의 주재)
해사감독기관은 필요한 경우 검사를 위하여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는 현장에 검사원을 주재시킬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장에서 주재하는 검사원의 사무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2조(설계기관, 제작공장, 기술봉사소에 대한 인증)
배설계기관, 기업소와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거나 그에 대한 기술봉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급규정에 따라 해사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설계하거나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제작 또는 그에 대한 기술봉사를 할 수 없다.

제43조(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수입)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 기관의 허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자료나 청문 갈등을 내야 한다.

제44조(배경사료금의 지불)
배경사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장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제45조(안전관리체계의 수립과 리점)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안전관리는 배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을 세워 항해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관리체계를 세우고 정확히 리점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관리체계수립의 내용)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안전관리와 관련한 문건과 배중서를 비밀없이 갖추어야 한다.
3. 배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세워야 한다.
4.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성원들의 임무분담을 정확히 하고 련락체계를 기동성 있게 세워야 한다.
5.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세워야 한다.
6. 비상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7. 안전관리의 요구에 맞게 배의 승선인원과 기술상태를 보장하여야 한다.
8. 내부안전관리검토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47조 (안전관리검열의무)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검
열을 받아 해당한 중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검열을 받지 않은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할 수 없다.

제48조 (안전관리검열의 신청)
안전관리검열을 받으려는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관리검열신청서
를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배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
료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안전관리검열진행)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검열체계를 바로세우고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
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검열은 초기, 년차, 중간, 갱신 및 추가검열로 나누어 하여 한다.

제50조 (안전관리중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검열에서 합격된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
한 중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에는 안전관리중서를,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
체에는 안전관리행정중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새로운영하는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잠정안전관리중서 또는 잠정
안전관리행정중서를 발급한다.

제51조 (안전관리중서의 유효기간)
안전관리중서와 안전관리행정중서는 5년간, 잠정안전관리중서는 6개월간, 잠정
안전관리행정중서는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안전관리중서는 중간검열, 안전관리행정중서는 년차검열을 통하여 그 효력을 확
인받아야 한다.

제52조 (안전보장체계의 수립과 리행위)
배와 항시설에 대한 안전보장은 외부로부터 침습할 수 있는 위협을 막고 사람과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체계를 세우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53조 (안전보장일문의 전달)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일문을 신고하며야 한다.
안전보장일문은 해당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접수할 수 있다.

제54조 (안전보장계획)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정령을 정상적으로 기록하며 안
전보장과 관련한 문건을 갖추고있어야 한다.

제55조 (안전보장설비의 운영)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보수정비
하여야 한다.
제56조 (안전보장검열의무)
국제항해하는 레저선, 총톤수 500미만의 배와 항운영기판은 해사감독기판으로부터 안전보장검열을 받아야 한다.
배와 항운영기판의 안전보장검열기준은 해사감독기판이 정한다.

제57조 (안전보장검열신청)
안전보장검열을 받으려는 배와 항운영기판은 안전보장검열신청서를 만들어 해사감독기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 또는 항운영기판의 자료 검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안전보장검열진행)
해사감독기판은 배와 항운영기판의 안전보장실태에 대한 검열을 하고 안전보장증서 또는 임시안전보장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안전보장증서는 배를 새로운 운항 또는 구입하였거나 국적 및 배운영기판, 기업소,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발급한다.
안전보장증서는 5년간, 임시안전보장증서는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59조 (항해구역의 설정)
배는 항해진 항해구역안에서 항해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판은 배의 크기와 속도, 항해감당력 갑은것을 고려하여 배에 항해구역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60조 (항해안전규정의 준수)
배는 사명과 용도에 맞게 운항하며 인명안전규정, 총돌에방규정과 해상질의 배치, 보관, 취급, 수송과 관련한 안전규정의 요구를 억제히 지켜야 한다.

제5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

제61조 (다른 나라 배의 검열의무)
우리 나라는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공화국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준수정행에 대하여 해사감독기판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다른 나라 배의 입항에 대한 통지)
배대리기판은 다른 나라 배가 우리 나라는해에 들어오는 경우 그 배에 대한 검열을 제때에 할수 있도록 해사감독기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해사감독기판의 검열권한)
해사감독기판은 공화국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는해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를 억제히 검열하여야 한다.
어지할수 없는 사유로 우리 나라는해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요구에 따라 항해감당력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이 경우 국세해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배에 대하여서는 공화국해사법규에 따라 조사한다.

제64조 (다른 나라 배의 결함에 대한 대책)
해사감독기판은 다른 나라 배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것을 제때
에 퇴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상태나 향해감당력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할 때까지 출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65조 (다른 나라 배의 결함퇴치 후 검사)
다른 나라 배는 결함을 퇴치한 다음 해사감독기관에 신청하여 해당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66조 (다른 나라 배의 검열과정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통보 및 처리)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의 검열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국제해사기구와 지 역별 외국배검열기구, 배가 속한 나라에 통보하고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7조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해사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배안전사업과 관련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8조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는 각각의 통일적인 지도범위에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안전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69조 (신규규정의 작성 및 지도)
내각과 중앙해사감독지도기관은 신규규정을 비롯한 해사규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그 집행에 대한 지도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70조 (배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배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배안전사업에 대한 정책집행정 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1조 (다른 나라 배의 억류 및 벌금부과)
공화국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어긴 다른 나라 배는 억류하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7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원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설계로 배를 진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였을 경우
2.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수입하였을 경우
3.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배 또는 범설계에 도입하여 배 안전사례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배의 겸사와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받았을 경우
5. 정해진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였거나 만재장갑선규정, 인명안전규정, 총돌 예방규정, 해상진안전규정을 어기고 항해하였을 경우
6. 배설비, 무선설비를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고 항해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설비, 의장품의 형태, 구조를 변경시켰을 경우
8. 배증서를 위조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증서를 가지고 항해하였을 경우
9.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점검에 합격되지 못한 배를 운영하였을 경우
10. 다른 나라 배의 입항통지를 제때에 하지 않아 그에 대한 점검사업에 지장하여 주었을 경우
11. 근무복무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지키지 않아 배가 다른 나라에 나가 대외적 위협을 끼쳤거나 국가적손실을 주었을 경우

제73조(형사책임)
제72조의 행위가 법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 원 법

주체98(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례 제485호로 채택

제1장 선원법의 기본

제1조(선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은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심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선원대결을 통한히 꾸리며 배의 관리와 항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선원의 구분)
선원은 배관리의 주인이며 항해의 직접적담당자가이다.
선원은 지휘선원과 일반선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선원의 양성원칙)
선원양성은 능력있는 선원을 전양성 있게 키워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선원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질적수준을 부단히 높이도록 한다.

제4조(선원의 등록원칙)
선원등록을 바르다는 것은 해사감독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선원등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5조(선원의 기술자격심사원칙)
국가는 선원기술자격심사질서를 바로세우고 기술자격심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선원의 책임성과 역할제고원칙)
국가는 선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그들이 항해와 배관리에 주인담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심사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선원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선원양성 및 등록, 기술자격심사기관, 선원
제2장 선원의 양성

제9조 (선원양성기관)
선원양성은 해당 전문교육기관과 선원양성소 또는 혼련소 같은 선원양성기관에서 한다.
선원양성기관에서 교육 또는 혼련을 받지 않고는 선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선원양성의 질적수준보장)
선원양성기관은 선원양성의 질관리체계를 갖추고 교육 또는 혼련수준을 끌어내어 항해와 배관리임무를 원만히 담당수행할 수 있는 선원을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해당 전문교육기관은 항해와 배의 기관, 전기설비, 무선통신 같은 전문부문의 교육을 위한 과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전진적인 교수방법을 받아들여 실모하는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전문부문의 교육과정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12조 (선원양성소 또는 혼련소의 운영)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훈련을 위하여 선원양성소 또는 혼련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선원양성소 또는 혼련소의 업무)
선원양성소 또는 혼련소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훈련시설과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혼련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혼련내용과 방법을 바로 정하며 혼련생에게 항해와 배관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동작을 실속 있게 배워 주어야 한다.
선원양성소 또는 혼련소의 선원훈련과정은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선원훈련구분과 대상)
선원훈련은 기초양적훈련과 전문훈련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처음 배에 승선하거나 일정한 기간 배에서 내렸다가 다시 배에 승선하려는 선원에게는 기초양적훈련을, 지휘선원과 정해진 배에 승선하려는 선원에게는 전문훈련을 준다.
제15조 (실습)
선원양성기관은 실습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실습을 통한 교육 또는 혼련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양성에 필요한 실습조건을 충족히 보장해야 한다.

- 567 -
제16조 (배에서의 선원혼련)
배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서의 혼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혼련정형을 혼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선원혼련교원 및 지도선원의 자격)
선원양성소 또는 혼련소의 교원과 배의 혼련지도선원은 해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선원혼련을 줄 수 없다.

제18조 (선원혼련평가신청)
혼련을 받은 선원은 해사감독기관의 혼련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의 혼련평가를 받으려 할 경우 15일전에 선원혼련평가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19조 (선원혼련평가와 종서발급)
선원혼련평가신청을 받은 해사감독기관은 해당 선원에 대한 혼련평가를 제때에 진행하여야 한다.
선원혼련평가결과 합격된 선원에게는 선원혼련증서를 발급한다.
선원혼련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20조 (선원등록기관)
선원등록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기준과 절차를 바로 정하고 선원등록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1조 (선원등록신청)
선원등록의 신청은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선원등록하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 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선원등록신청문건에는 해당 선원의 신분관계, 경력, 교육 또는 혼련을 받은 정형, 기술자격소유정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2조 (선원등록심의기간)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 심의하고 선원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등록심의결과를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 (선원등록심의자료요구)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선원등록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제기 및 처리)
선원등록심의결과에 의견이 있는 배운영기관, 기업체, 단체는 선원등록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사감독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체,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 (선원등록)
해사감독기관은 등록이 승인된 선원을 선원등록부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선원은 5년에 한번씩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 (선원증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등록된 선원에게 선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에 따라 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과 국내항해하는 배의 선원을 구분하여 해당한 선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전을 대신한다.
선원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27조 (선원등록의 변경, 삭제)
다음의 경우에는 선원등록을 변경하거나 삭제한다.
1. 기관, 기업체, 단체의 명칭 또는 소속이 달라졌을 경우
2. 선원의 직무가 달라졌을 경우
3. 선원이 해임되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제28조 (선원증의 재발급)
다음의 경우에는 선원증을 재발급받는다.
1. 선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2. 선원증이 오손되었을 경우
3. 선원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선원증의 변경등록을 다 썼을 경우

제29조 (선원증의 반환)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체, 단체는 선원이 사망하였거나 해임되었을 경우 30일 안으로 선원증을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선원증을 재발급받을 경우에는 낡은 선원증을 바쳐야 한다.

제4장 선원의 기술자격심사

제30조 (선원기술자격심사의 기본요구)
선원기술자격심사는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기준과 선원기술자격시험응시기준을 바로 정하고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기술자격급수)
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기술자격급수는 다음과 같다.

1. 항해부문
   향해1급: 총톤수 3000이상 배의 선장
   향해2급: 총톤수 500이상 3000미만 배의 선장
   향해3급: 총톤수 3000이상 배의 부선장
   향해4급: 총톤수 500이상 3000미만 배의 부선장
   향해5급: 총톤수 3000이상 배의 항해사
   향해6급: 총톤수 500이상 3000미만 배의 항해사
   항해당직원: 항해 및 정박당직에 맡기되는 간판원

2. 기관부문
   기관1급: 기관출력 3000KW이상 배의 기관장
   기관2급: 기관출력 750KW이상 3000KW미만 배의 기관장
   기관3급: 기관출력 3000KW이상 배의 부기관장
   기관4급: 기관출력 750KW이상 3000KW미만 배의 부기관장
   기관5급: 기관출력 3000KW이상 배의 기관사
   기관6급: 기관출력 750KW이상 3000KW미만 배의 기관사
   기관당직원: 기관당직에 맡기되는 조기원

3. 전기부문
   전기사1급: 발전기출력 500KW이상 배의 전기사
   전기사2급: 발전기출력 500KW미만 배의 전기사

4. 무선통신부문
   세계해상조난안전체제 무선통신사1급: 세계해상조난안전체제항해구역 A1~A4까지 항해하는 배의 통신사
   세계해상조난안전체제 무선통신사2급: 세계해상조난안전체제항해구역 A1~A2까지 항해하는 배의 통신사
   세계해상조난안전체제 일반운영사: 항해부문의 지휘선원

제32조(국내항해하는 배의 선원기술자격급수)
국내항해하는 배의 선원기술자격급수는 다음과 같다.

1. 항해부문
   향해1급: 총톤수 500이상 1000미만 배의 항해사
   향해2급: 총톤수 150이상 500미만 배의 항해사
   향해3급: 총톤수 50이상 150미만 배의 항해사
   향해4급: 총톤수 10이상 50미만 배의 항해사
   향해5급: 총톤수 5이상 10미만 배의 항해사
   향해6급: 총톤수 5미만 배의 항해사

2. 기관부문
   기관1급: 기관출력 750KW이상 2500KW미만 배의 기관사
   기관2급: 기관출력 300KW이상 750KW미만 배의 기관사
기관3급: 기관출력 150kW이상 300kW미만 배의 기관사
기관4급: 기관출력 75kW이상 150kW미만 배의 기관사
기관5급: 기관출력 25kW이상 75kW미만 배의 기관사
기관6급: 기관출력 25kW미만 배의 기관사

3. 전기부문
전기사: 발전기출력 500kW미만 배의 전기사

제33조(배급안내사자격급수)
배급안내사자격급수는 다음과 같다.
배급안내사1급: 총론수 3000이상 배의 배급안내원
배급안내사2급: 총론수 3000미만 배의 배급안내원
보조배급안내사: 보조배급안내원

제34조(해사감독기관의 선원기술자격심사조직일부)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계획을 바로세우고 심사기간과 기술자격시험방향을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체, 단체에 통지하며 선원기술자격심사성원을 능력을 입으로 선정하고 선원기술자격시험문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35조(선원기술자격심사의 신청)
선원기술자격심사신청은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체, 단체가 한다.
선원의 기술자격심사를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체, 단체는 선원기술자격심사를 하기 15일전으로 해당 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36조(선원기술자격심사의 구분)
선원기술자격심사는 제3급급심사, 승려급급심사로 구분하여 한다.

제37조(선원기술자격심사)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자격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심사결과는 15일간으로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체,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의 조직)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위하여 비상설로 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에는 해당 전문인들을 맡아시켜야 한다.

제39조(선원기술자격증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에서 합격된 선원에게 해당한 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40조(선원기술자격증의 제발급)
선원기술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슨시켰을 경우에는 선원기술자격증을 제발급받는다. 이 경우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체, 단체는 선원기술자격증 제발급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다른 나라 선원의 기술자격증 또는 보증서발급)
우리 나라 배에 승선하는 다른 나라 선원에게는 해당 나라의 선원기술자격증을 인정하는 보증서 또는 우리 나라 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할수 있다.

제42조(림시선원기술자격증의 발급)
국제항해하는 배의 항차중에 사망, 급병 같은 이유로 결원된 지휘선원의 직무에 한급 낮은 기술자격을 가진 지휘선원을 릴시배치하려 할 경우 해사감독기관은 그에게 6개월기간의 릴시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할수 있다. 이 경우 선장, 기관장, 무선통신사의 직무에는 3개월기간의 릴시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제43조(선원기술자격증의 효력)
선원기술자격증이 없는 선장, 기관장, 부선장, 부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무선통신사, 전기사 같은 지휘선원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

제5장 선원의 임무

제44조(선원의 일반임무)
선원은 자기가 맡은 임무에 정통하며 그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선장)
선장은 배의 총책임자이다. 
선장은 선원과 레ğer, 배판리, 항해에 대한 지휘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며 배에 있는 인원 및 재산보호, 배의 안전항해보장, 해상환경보호책임을 진다.

제46조(부선장)
부선장은 감관부문의 책임자이며 선장의 1대리인이다.
부선장은 항해 및 정박당직, 배판리, 화물수송과 관련한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부적한 사정으로 선장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대리임무를 수행한다.

제47조(항해사)
항해사는 배의 안전항해와 해상환경보호, 담당설비에 대한 관리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부선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대리임무를 수행한다.

제48조(기관장)
기관장은 기관부문의 책임자이다.
기관장은 기관부문의 설비와 감관부문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집행한다.

제49조(부기관장)
부기관장은 기관부문의 부책임자이며 기관장의 1대리인이다.
부기관장은 기관부문의 항해 및 정박당직과 기관부문사업을 조직집행하며 담당한 설비에 대한 관리운영과 정비를 책임진다.
제50조 (기관사)
기관사는 기관창의 지시밀에 탑달한 설비의 관리운영과 정비를 하며 기관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

제51조 (경기사)
경기사는 배의 경기설비에 대한 관리운영을 책임진다.
경기사는 기관창의 지시를 받는다.

제52조 (무선통신사)
무선통신사는 배업무통신과 조난통신을 원만히 보장할 책임을 진다.
무선통신사는 선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53조 (갑판장)
갑판장은 갑판원의 책임자이다.
갑판장은 갑판원의 작업을 조직하며 선체와 갑판구조물에 비롯한 갑판설비와 기
공구, 비품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4조 (갑판원)
갑판원은 갑판장의 지시밀에 화물과 갑판설비를 관리하며 갑판에서 제기되는 작
업을 수행한다.

제55조 (조기장)
조기장은 조기원의 책임자이다.
조기장은 조기원의 작업을 조직하며 기관부문의 설비에 대한 정비와 자재관리를
책임진다.

제56조 (조기원)
조기원은 조기장의 지시밀에 기관부문의 설비운영과 정비를 한다.

제57조 (기라 선원)
기라는 배의 위생관리와 선원의 건강을 책임진다.
후방부문의 선원은 후방사업과 생활상편의보장사업을 책임진다.

제58조 (당직근무)
선원은 정해진 당직기준에 따라 항해 및 정박당직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직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6장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9조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밀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하여
야 한다.
제60조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켜야 할 요구)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신원양성기관의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해당한 중서를 갖춘 선원을 승선시키며, 신원기술자격요건도와 능력에 맞게 적합한 업무를 주어야 한다.
2. 정해진 최소안전정원기준과 의료기준에 맞게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3. 로동안전, 로동보호대책을 엄격히 세우며 선원에게 휴식과 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4. 선원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선원의 경력,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정형, 신체검사정형, 자격증소유정형 같은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 (선원생활조건에 맞는 배설계 및 건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설계하거나 건조, 개조하는 경우 점검, 식당을 비롯한 생활시설을 선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 (선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선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선원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3조 (마른 나라 배 선원의 경험)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의 선원에 대하여 신원양성, 자격증명,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는 증서 또는 자격증소지정형과 선원양성, 자격증명,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검열결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것을 회치할때까지 항해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64조 (행정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선원등록신청을 거짓으로 하여 선원등록사업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2. 선원등록, 선원훈련평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선원증,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을 경우
3. 선원증이 없는 인원을 배에 승선시켰을 경우
4. 선원기술자격급수에 맞지 않게 업무분담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5. 당직근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6. 최소안전정원기준을 어겨 배의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선원증,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을 위조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중서를 가지고 항해하였을 경우
8. 배설계와 건조, 개조를 무책임하게 하여 선원생활에 불편을 조성하였을 경우

제65조 (형사처벌)
이 법 제64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벌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반

제1조 (해사감독법의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은 해사감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해상에서 사람의 생명과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배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해사감독사업의 강화원칙)
해사감독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해사감독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도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보낸다.

제3조 (해사감독기관의 설치원칙)
해사감독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가는 감독대상이 집중되어있고 감독사업이 편리한 지역에 해사감독기관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4조 (해사감독체계의 수립원칙)
국가는 해사감독체계를 바로세우고 해사감독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도록 한다.

제5조 (해사감독의 과학성, 객관성, 신속성 보장원칙)
국가는 해사감독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해사감독일군의 자격)
해사감독은 해사감독일군에 대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국가는 해사감독일군대를 토대로 훈련을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제7조 (해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해사분야에서 다른 나라가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국제해사협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사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배의 등록

제9조 (배등록의 기본요구)
배를 등록하는 것은 배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부에 배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이름, 선적항, 호출부호, 번호의 제정)
배의 이름과 선적항은 배임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함의를 받는다.
배의 호출부호와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는 전과감독기관이 정한다.

제11조 (배등록의 신청)
배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적항을 정하고 해사감독기관에 배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매매 또는 양도와 관련한 배등록신청서에는 공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내용과 등록증서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등록할 배의 이름과 선적항, 배임자기관의 이름, 영업주소, 등록 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번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기술제원, 배의 매매, 양도, 저당관계와 같은것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배에는 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배등록증서의 제발급)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등록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시킨 경우 해당 해사감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배등록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한 배의 표식)
등록한 배의 지정된 위치에는 배이름, 선적항을 표시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로 항해하는 배에는 국제해사기구번호를 함께 표시한다.

제15조 (공화국국적취득의 신청)
공화국국적을 취득하려는 다른 나라 배는 해사감독기관에 국적취득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적취득신청서에는 배이름, 선적항, 국적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배등록의 삭제)
다른 나라에 판매되었거나 침몰, 화재, 파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5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배와 폐기시킨 배는 등록에서 삭제한다.

제3장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

제17조 (선원등록과 자격심사의 기본요구)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를 정확히 하는것은 선원을 꾸리고 그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해사감독기판은 선원의 동록과 배기기술자격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선원의 동록조전)
선원등록은 배치되었거나 채용한 선원에 대하여 한다.
해사감독기판은 선원등록부와 배기기술자격등록부, 동록카드에 선원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선원등록의 방법과 기한)
해사감독기판은 선원을 지휘선원과 일반선원으로 갈라 동록하여야 한다.
선원은 5년에 한 번씩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배기기술자격의 심사)
지휘선원과 배경안내사는 해사감독기판의 배기기술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선원도 신청에 따라 배기기술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배기기술자격은 5년에 한 번씩 재심사한다.

제21조(선원증, 배기기술자격증, 배기기술자격보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판은 동록 또는 재등록하였거나 배기기술자격심사에서 합격한 선원에게 선원증 또는 배기기술자격증, 배기기술자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배에 타는 다른 나라 선원에게는 해당 나라의 배기기술자격증을 인정하는 보증서 또는 우리 나라의 배기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제22조(선원증의 효력)
선원증은 배의 선원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다른 나라로 항해하는 배의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련을 대신한다.

제23조(선원증과 배기기술자격증의 역할)
선원증이 없는 배를 탈 수 없으며 배기기술자격증이 없는 선장, 부선장, 기관장, 부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전기사, 무선통신사, 배경안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4조(배의 최소안전정원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판은 배의 크기와 구조, 기관의 수량, 출력, 기술장비, 항해거리 같은 것 을 타산하여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를 정하고 최소안전정원증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항해하는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는 운항증서에 밝혀주어야 한다.

제25조(선원혼련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판은 선원양성소 또는 혼련소에서 혼련을 받은 선원에게 선원혼련증서 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4장 해난사고의 조사처리

제26조(해난사고조사처리의 기본요구)
해난사고의 조사처리는 해사감독기판의 중요임무이다.
해사감독기판은 정해진 기준과 객관적증거에 기초하여 해난사고를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해난사고의 종류)
해난사고에는 배의 침몰, 침수, 충돌, 좌초, 좌주, 파손, 고장, 화재와 인명피해 같은것이 속한다.
배에 의한 바다, 강, 호수의 오염도 해난사고로 인정한다.

제28조 (해난사고의 처리관할)
해사감독기관장은 우리 나라 영해, 경제수역, 강, 호수에서 일어난 해난사고를 조사처리한다.
다른 나라 수역과 공해에서 해난사고를 일으킨 우리 나라 배에 대하여도 조사처리한다.

제29조 (해난사고의 통보)
기관장, 기업소장, 단체의 공민은 해난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해사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난사고에 대하여 통지받은 해사감독기관은 제28조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해난사고보고서의 작성)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선장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장,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에 해난사고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문건과 각종 증서, 배기술문건, 해도, 항해 일지, 기관일지, 기름작업기록부, 배운영일지 같은것을 함께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우리 나라 영해 또는 경제수역에서 해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해난사고보고서를 내야 한다.

제31조 (해난사고의 감정)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를 정확히 조사정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분해하거나 부분을 제거하여 대상물을 촬영, 측정, 분석하는 방법으로 감정할 수 있다.

제32조 (해난사고의 일으킨 배의 통제)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는 사고조사가 끝나기 전에 항해할 수 없음.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선장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장, 단체는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책임있는자를 통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심의처리에 대한 의견의 제기)
해난사고의 심의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장, 단체와 공민은 그것들을 결정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재판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 (조사가 끝난 배의 항해안전점검)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난 배의 항해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다.
배운영기관, 기업소장, 단체의 요구에 따라 해난사고의 조사처리문건과 해난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제5장 배설계의 심의

제35조 (배설계심의의 기본요구)
배설계의 심의를 따로보는것은 배와 설비, 의장품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담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심의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의무적인 배설계심의)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만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심의를 받지 않고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생산할 수 없다.

제37조 (배설계심의의 신청)
배설계를 심의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설계심의신청서와 설계문건을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를 수리하려 할 경우에는 배내리기기관이 배설계심의신청서와 설계문건을 낼다.

제38조 (배설계의 심의방법)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에서 향해감당력과 구조, 재료, 설비, 의장품, 경제적효과성 같은것이 보장되었는가를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설계의 심의는 두 나라의 해사법규와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한다.

제39조 (배설계유효기간의 설정)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를 심의하고 유효기간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배설계는 리용할 수 없다.

제40조 (배설계의 제설의)
심의 받은 배설계를 고친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배설계심의를 다시 받는다.
배설계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설계심의를 다시 받는다.

제41조 (발명, 창의고안, 프로그램의 도입)
배에 발명이나 창의고안, 프로그램 같은것을 새로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계의를 받는다.

제42조 (배설계의 내용표기)
수출하는 배와 다른 나라로 향해하는 배설계의 내용표기는 조선어와 영어로 한다.

제6장 배검사

제43조 (배검사의 기 본 요구)
배검사를 정확히 하는 것은 배의 향해감당력을 보장하고 수명을 늘이기 위한 중요답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건조, 개조, 수리정형과 설비, 의장품을 갖춘 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44조 (배검사의 구분)
배검사는 제조검사와 운항검사로 나누어 한다.
제조검사는 건조하는 배, 운항검사는 운영하는 배에 대하여 한다.
제45조(배검사의 신청)
배의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검사신청서를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해사감독기관의 운항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낼다.
제46조(제조검사)
배의 제조검사는 건조검사와 예비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비와 의장품에 대한 예비검사는 생산현장에서 직접 하거나 해당 품질감독기판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47조(운항검사)
배의 운항검사는 초기검사, 연차검사, 중간검사, 경신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검사, 임시운항검사, 선착외관검사 같은것을 조직할 수 있다.
제48조(공정검사)
해사감독기판은 진조, 개조, 수리하는 배에 대하여 공정별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진행한 공정검사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제49조(최종검사)
진조, 개조, 수리한 배에 대한 최종검사는 계류시운전검사와 항해시운전검사로 나누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진조, 개조, 수리한 배의 시운전지도서를 작성하여 해사감독기판에 내야 한다.
제50조(다른 나라에서 배의 운항검사)
공화국령역밖에서 항해하고있는 검사유 효기간이 지난 배의 운항검사는 공화국해 사대표기관이 한다.
공화국해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해사감독기판이 직접 하거나 다른 나라 배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51조(검사중서의 발급)
해사감독기판은 제조 또는 운항검사에서 합격된 배에 운항중서, 협약중서, 선급중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중서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진행한 다른 나라 배에는 해당 중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제52조(보험검사)
해사감독기판은 보험기판의 신청에 따라 배보험검사 혹은 상태평가검정을 하고 조서를 발급하여야 할 수 있다.

제7장 배와 배운영기관, 항시설의 안전검열

제53조(안전검열의 기본요구)
배와 배운영기관, 항시설에 대한 안전검열은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람의 생명과
해양생태환경, 채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조치정형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관리검열의 종류)
안전관리검열은 잠정중서발급을 위한 검열과 완전중서발급을 위한 검열로 나누어 한다.
잠정중서발급을 위한 검열은 운영을 시작하는 배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완전중서발급을 위한 검열은 이미 중서를 받고 운영하는 배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 한다.

제55조(안전관리검열의 신청)
안전관리검열을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에 검열신청서를 내야 한다.
검열신청서를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검열신청과 배에 대한 검열신청으로 나누어 내야 한다.

제56조(안전관리증서의 발급)
검열신청을 받은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하여야 한다.
검열에서 합격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안전관리행증서를, 배에는 안전관리증서를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안전관리행증서와 안전관리증서는 5년, 잠정안전관리행증서는 1년, 잠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57조(년차 또는 중간검열)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행증서 또는 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은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 년차검열과 중간검열을 하고 중서의 효력을 확인하여주어야 한다.
해난사고 같은것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검열을 할수 있다.

제58조(다른 나라 배와 배운영기관의 안전관리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다른 나라 배와 배운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하고 해당 중서를 발급하여줄수 있다.

제59조(안전보장검열의 신청)
안전보장검열을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항운영기관은 해사감독기관에 검열신청서를 내야 한다.
검열신청서는 배에 대한 검열신청과 항시설에 대한 검열신청으로 나누어 내야 한다.

제60조(안전보장일군배치정형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의 안전보장일군배치정형을 검열하고 해당 일군에게 배 및 항시설 안전보장일군훈련증서를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제61조(안전보장계획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이 배, 항시설에 대한 안전보장평가를 하고 평가서와 안전보장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 581 -
안전보장정책과 안전보장계획서는 해사감독기관이 검토하고 승인한다.

제62조(안전보장기록부의 기입)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이 안전보장기록부에 안전보장계획서의 리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기록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안전보장기록부는 정한 기간까지 배에 보관한다.

제63조(안전보장설비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시설에 안전보장설비를 갖춘 정형과 가동정형, 보수정비정형, 비상시의 사용준비정형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64조(안전보장중사의 발급)
배와 항시설의 안전보장정형에 대하여 검열한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에 안전보장중서 또는 임정안전보장중서를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안전보장중서는 5년, 임정안전보장중서는 6개월간 효력이 가진다.

제65조(다른 나라 배의 안전보장검열)
해사감독기관은 임원하는 다른 나라 배의 안전보장정형을 검열하고 국제안전보장기준에 이르지 못한 배의 임원을 거절할 수 있다.
다른 나라 배로부터 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한 조치를 취하며 배가 소속한 나라와 국제해상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

제66조(다른 나라 배경력의 기본요구)
다른 나라 배의 검열을 강화하는 것은 해상안전과 해양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근본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경력체제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67조(다른 나라 배의 검열기준)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범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에 대하여 공화국의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준수정형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68조(여지할수 없는 사유로 들어온 다른 나라 배의 조사)
여지할수 없는 사유로 우리 나라 범해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요구에 따라 항해감담력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해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배에 대하여서는 공화국 해사법규에 따라 조사한다.

제69조(선급검사 또는 도크상가검사)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를 검열하는 과정에 배의 기술상태가 불량하거나 항해감담력에 의심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선급검사, 도크상가검사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다른 나라 배 검열결과의 처리)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의 검열결과에 제시된 문제를 국제해사기구와 지역의국비검열기구, 배가 속한 나라에 통보하고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장 배에 의한 바다환경오염의 통제

제71조 (바다환경오염통제의 기본요구)
배와 해상시설물에 의하여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은 해양생태환경을 보존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바다자원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해상시설물을 운영과정에 바다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제72조 (환경오염물질배출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해상시설물에서 기름, 유독성물질, 버팀물 같은것을 배출하지 않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기준과 배출방법을 정하는 사항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73조 (배의 구조, 복원성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를 환경오염을 막을수 있는 구조, 복원성의 요구대로 전조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유조선의 현측과 선저는 파손에 의한 기름오염을 최대로 줄일수 있도록 2중선체구조를 가져야 한다.
4 000t이상의 기름을 수송하는 배는 분리된 발라스트탱크를 가져야 한다.

제74조 (기름의 적재제한)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선수탱크와 총돌격벽의 앞쪽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로 정한 배의 해당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할수 있다.

제75조 (발라스트물관리기준)
해사감독기관은 배가 발라스트물을 교체기준, 작업기준, 처리기술에 따라 정해진수역에서 교체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발라스트물의 관리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76조 (유해도료의 사용금지)
해사감독기관은 해양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유해도료 같은 생물살상제를 배의 철갑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유해도료를 배의 철갑으로 사용할수 없다.

제77조 (저장된 오염물질의 처리)
해사감독기관은 입항하는 배의 기름재끼, 버팀물, 유독성물질을 해당 기관에 정확히 넘겼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제78조 (작업기록부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오염물질작업기록부에 작업정형을 정확히 기록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작업기록부는 선장이 수록하여 정한 기간까지 배에 보관한다.
제79조(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서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서를 검열하여야 한다.
기름수송배와 총톤수 400이상의 배에는 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제80조(국제오염방지종서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국제오염방지종서가 있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위험화물을 산적하여 수송하는 배의 적합성증서도 검열하여야 한다.
제81조(민사책임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2000t이상의 기름 또는 연유를 산적하여 수송하는 배에 기름오염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는 민사책임증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0장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82조(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의 해사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
이다.
국가는 해사감독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
도록 한다.
제83조(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범위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사업정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84조(해사정책집행을 위한 문제토의)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가의 해사정책집행에서 제기되
는 중요한 문제를 제때에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85조(해사감독기관의 임무)
해사감독기관은 해사부문의 법규와 국제협약,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며 그 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86조(배사고방지대책월간)
국가는 배의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하여 배사고방지대책월간을 정한다.
배사고방지대책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87조(해사감독조견의 보장)
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문건, 자료, 설비 같은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 584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사감독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88조(해사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89조(항해중지 또는 벌금)
검사, 검열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한 증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증서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배는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90조(증서의 회수)
위조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발급한 선원증, 배기술자격증 같은 증서는 회수 한다.

 제91조(손해보상, 역류, 물수, 기술자격정지, 강금, 박탈, 선원등록취소)
해난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배를 역류, 물수하거나 원상복구시키며 해당 선원의 배기술자격을 납치하거나 박탈하고 선원등록을 취소한다.

 제92조(다른 나라 배에 대한 제재)
해사법규를 어긴 다른 나라 배는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역류하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9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해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